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연구보고서

국제사회 대북 경제제재의 현황과 이행 평가

박 지 연

2016.10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연구보고서

국제사회 대북 경제제재의 현황과 이행 평가

박 지 연

2016.10



서 문

북한은 핵실험을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개발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반도에서 경제제재는 이미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제제재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대북제재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제제재는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형태로 부과되어왔습니다. 특히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경제제재가 주된 외교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 간의 경제관계가 확대됨으로써 경제 제재를 활용해 상대 국가를 위협하는 것에 대한 기대효과가 크게 증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 특히 군사기술의 발달로 무력제재 활용에 대한 위험부담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경제제재가 더욱 자주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대안이 발견되지 않는 한, 경제제재의 활용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유관 기관 및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10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요 약

- 최근 국제사회는 무력사용을 통한 문제해결보다는 경제제재를 활용한 갈등해결을 선호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북한은 정권수립 직후부터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국이었음.
 - 1950년부터 미국은 북한의 공산정권에 대한 경제제재를 부과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북한의 핵보유 의혹과 관련하여 다수의 제재를 부과함.
- 그런데 대부분의 제재는 그 효과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됨.
 - 일반적으로 특정 행위는 효과가 높을 경우 반복되는데, 경제제재의 경우 효과가 없더라고 지속적으로 강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 북한은 지난 3월 유엔 결의안 2270호에 의해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으로 재차 결정됨.
 - 제재안은 전례 없이 강력한 사안들을 담고 있었음.
- 한편 2016년 8월 21일 기준으로 44개 유엔 회원국의 대북 결의안에 대한 이행보고서가 공개됨.
 - 권고대로 6월 2일까지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18개에 불과함.
 -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아주 초기 단계의 제재 이행을 보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관련 부처에 해당 사항을 통보하였으며,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라는 수준임.

- 다만,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재 조치 방법과 독자제재 추진 현황을 보고하였음.

□ 기본적으로 북한의 무역구조는 매우 폐쇄적이기 때문에 외부와의 경제적 단절에 따른 피해가 여타 국가들과 비교해 낮음.

- 더구나 인도주의적 목적 및 민간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제재 적용 애매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 경험을 통한 대비책으로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의 가능성이 있음.

□ 결국, 제재 이행이 본격화되더라도 제재의 경제적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한편으로 경제제재의 효과는 단순히 경제적 실효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실효성과는 무관하게 나타나는 외교적 실효성에 대한 기대가 가능함.

- 즉 경제제재의 경제적 효과와 무관한 북한과의 대화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 이것은 중국과 미국이라는 거대 행위자의 대외정책 결정과 북한이라는 행위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차례

I. 서론	1
II. 경제제재의 이해	3
1. 경제제재의 정의	3
2. 경제제재 발의 현황과 사례	7
3. 경제제재의 실효성 논의	22
III. 국제사회 대북 경제제재의 현황	34
1.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	34
2. 개별국의 대북 경제제재	53
IV. 대북 경제제재의 이행 평가	66
1. 최근 이행보고서 분석	66
2. 기타 이행 평가	71
V. 결론	74
참고문헌	77
붙임.	
1.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 비공식 번역본	82
2.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874호 비공식 번역본	88
3.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094호 비공식 번역본	95
4.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70호 비공식 번역본	108

I

서론

- 경제제재가 외교술 중 하나로 국제사회에 도입된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짐.
 - 문헌기록을 살펴보면 기원전 5세기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아테네 페리클레스의 대 스파르타에 대한 경제제재에서 시작되었음.¹⁾
- 한편 경제제재 도입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이후임.
 - 이것은 국가 간의 무역관계가 활성화되면서 무역에 대한 제재가 상대적으로 높은 레버리지를 갖게 되었기 때문임.
 - 더욱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양극체제 하에서 국가 간의 무력사용은 강대국들 간의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무력제재보다 경제제재를 유용한 외교술로 활용함.
- 최근 경제제재의 증가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여러 국가들이 대량 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이하 WMD)를 획득할

1) Hufbauer et al.,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 3rd edition*, Washington, DC: Peters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 2007. pp. 9-11.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무력제재에 따른 보복으로서 WMD 활용의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제재 발의 빈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무력사용을 통한 문제해결보다는 경제제재를 활용한 갈등해결이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북한은 정권수립 직후부터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국이었음.

- 1950년부터 미국은 북한의 공산정권에 대한 경제제재를 부과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북한의 핵보유 의혹과 관련하여 다수의 제재를 부과해오고 있음.
- 더불어 유엔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에 대해 다수의 경제제재를 부과해왔으며, 최근에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에 따른 경제제재를 부과한 바 있음.

□ 본 보고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의 부과 현황과 제재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시도함.

- 먼저 I 장 서론에서는 문제제기와 관련한 연구의 배경을 소개하였고, II장에서는 경제제재의 개념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인 경제제재의 정의와 현황을 서술함.
- 다음으로 III장에서는 유엔과 개별국가들의 대북 경제제재의 부과 현황을 분석하고, IV장에서는 제재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연구의 요약과 정책적 제언 등을 포함하는 결론은 V장에서 서술함.

II

경제제재의 이해²⁾

1. 경제제재의 정의

- ☐ 경제제재란 국가 혹은 집단이 무역 및 금융관계에 대한 철회 혹은 철회에 대한 위협을 통해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행위를 의미함.³⁾
- ☐ 경제제재는 크게 무역제재, 금융제재, 자산동결 및 기타제재 등으로 구분됨.
- ☐ 첫째, 무역제재에는 수출입금지, 관세인상, 차별관세, 블랙리스트 작성 등이 포함됨.
 - 수출입금지란 특정 품목에 대해 대상국으로의 수출 혹은 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통제하는 방법

2) 본 장의 논의는 <박지연, “경제제재 대상국의 의사결정 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과 <박지연, “국제사회 대북 금융제재의 현황과 시사점,”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 편, 『북한의 금융』, 오름, 2016>의 논의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힘.

3) 경제제재의 정의에 대한 논의는 David, Baldwin, *Economic Statecraf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pp.29-50을 참조

- 수입통제보다는 수출통제가 더욱 빈번히 도입되고 있는데, 발의국은 대상국이 상대적으로 수입품의 대체재 확보가 어려워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임.
- 관세인상은 특정 물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여하여 대상국으로 부터의 수입을 통제하는 방식의 제재임.
- 유사한 개념으로 제재 대상국에 대한 차별관세를 부과하여 관련한 품목의 수입을 통제하는 제재도 존재함.
- 더불어 특정 물품에 대한 수출입 관련 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도 있음.
- 둘째, 금융제재에는 금융거래에 대한 제재를 의미하는데, 현금(cash), 채권(bonds), 주식(stocks), 파생계약(derivative contracts) 등에 대한 구매 및 판매 금지를 포함함.
- 1970년대의 대부분의 현금흐름(cash flows)이 무역과 연관된 것이었던 반면 2000년대 들어 약 90% 이상이 상품거래와는 무관한 현금흐름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금융제재 도입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임.⁴⁾
- 셋째, 제재 대상국의 발의국 내 자산에 대한 동결도 대표적인 경제 제재의 수단으로 활용됨.
- 자산동결을 위해 금융제재가 활용되는 경우, 즉 금융자산의 동결이 최근 경제제재에 빈번히 도입되고 있는 추세임.

4) Benn Steil and Robert Litan, *Financial Statecraft*, Yale University Press, 2006, p. 3.

□ 더불어 기타제재로는 위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강제수단으로 여행금지, 항행금지 등이 포함됨.

- 여행금지는 특정인에 대한 고립을 통해 제재의 목표를 달성하는 형태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줄이면서 제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됨.

- 항행금지는 특정 구역에서의 이동 금지 및 유엔 회원국 내 이착륙 금지 등을 포함함.

□ 한편 경제제재는 양자제재와 다자제재로 나눌 수 있음.

- 양자제재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경제제재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 반면, 다자제재는 유엔 혹은 EU 등과 같은 국가들의 집단이 한 국가 혹은 국가들의 집단에 제재를 가하는 경우를 뜻함.

- 일반적으로 다자제재 이행은 복수의 양자제재 작동과 유사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음.

□ 경제제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외교적 목적은 반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인권보호, 내전 해결 및 민주주의 확산 등 다양함.

- 먼저 테러리즘에 대해 국제사회가 경제제재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는 안보리 결의안 1070호에 의한 대 수단 제재임.

○ 당시 수단이 이집트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한 수단 국적인에 대한 송환요구에 불응하면서 유엔은 항공 운송금지의 대 수단 경제제재를 발의하였음.⁵⁾

5) UNSCR 1070, <http://www.securitycouncilreport.org/atf/cf/%7B65BFCF9B-6D27-4E9C-8CD3-CF6E4FF96FF9%7D/Chap%20VII%20SRES%201070.pdf> (검색일: 2016년 3월 15일).

- 이후 2001년 9.11 테러공격에 따른 안보리 결의안 1373호가 채택⁶⁾된 이후 대테러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테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제재가 부과되고 있음.
- 다음으로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을 위해 국제사회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생산에 대한 제재와 그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가 이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임.
- 세 번째로 국제사회가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외교적 목적은 인권 보호를 위해서임.
- 특히 유엔은 탈냉전 이후 인권유린과 국제인권법 위반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로 경제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는 소년병사와 성폭력, 조직적 강간 등의 이유로 발의한 콩고민주공화국 반군 지도자들에 부과한 경제제재를 들 수 있음.⁷⁾
- 그 외 내전해결을 위해 국제사회는 경제제재를 활용해왔음.
- 내전해결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은 유엔이 경제제재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며, 대표적인 사례는 유엔의 시에라리온 반군에 대한 제재임.

6) UNSCR 1373, [http://www.un.org/en/sc/ctc/specialmeetings/2012/docs/United%20Nations%20Security%20Council%20Resolution%201373%20\(2001\).pdf](http://www.un.org/en/sc/ctc/specialmeetings/2012/docs/United%20Nations%20Security%20Council%20Resolution%201373%20(2001).pdf) (검색일: 2016. 3. 15).

7) UNSCR 1991, <http://www.securitycouncilreport.org/atf/cf/%7B65BFCF9B-6D27-4E9C-8CD3-CF6E4FF96FF9%7D/DRC%20S%20RES%201991.pdf> (검색일: 2016. 3. 15).

- 민주적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을 반군이 축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유엔은 반군에 대한 경제제재를 부과한 사례임.⁸⁾
- 최근 경제제재 부과 동기가 외교적 목적이기 보다 국내 정치적 목적이라는 주장도 있음.
-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직전의 미국의 대 일본 경제제재 부과는 국내의 애국심 고취를 촉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됨.
- 미국의 대 쿠바 제재 또한 실질적인 대상국의 행위 변화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내국인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assuage) 위해 활용되었음.⁹⁾

2. 경제제재 발의 현황과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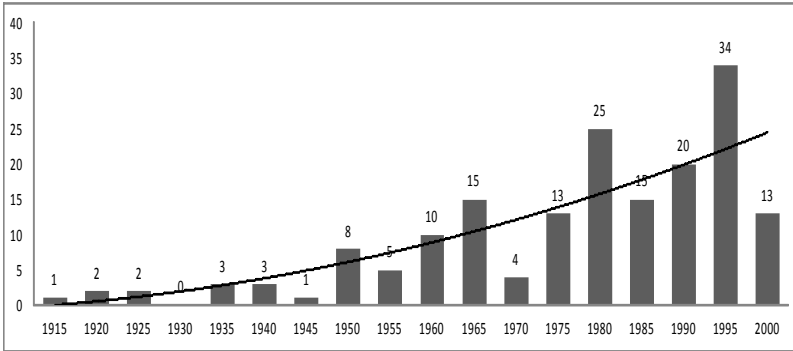
1) 현 황

- 경제제재는 오랜 역사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발의되어왔으며, 특히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경제제재가 국가들 간의 외교적 마찰을 조율하기 위한 도구로 빈번히 사용되어왔음.
- 피터슨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20세기 이후 국제사회 내에서 경제제재의 발의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으며, 증가 속도 또한 증가하고 있음.

8) UNSCR 1132, http://www.sipri.org/databases/embargoes/un_arms_embargoes/sierra_leone/1132 (검색일: 2016. 3. 15); Hufbauer 외,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 Peterson Institute, 2007, Case No. 97-1 참조.

9) Hufbauer 외(2007), p. 6.

〈그림 1〉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발의 현황



자료: Hufbauer et al,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 Peterson Institute, 2007, p. 18.

□ 경제제재 발의의 증가 원인은 두 가지로 요약됨.

- 첫째, 국가 간의 긴밀한 경제관계 형성으로 경제제재를 활용해 상대 국가를 위협하는 것에 대한 기대효과가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임.
- 둘째, 과학기술, 특히 군사기술의 발달로 무력제재 활용에 대한 위험부담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임.
- 과거 무력제재 도입은 국지전 형태로 제한적이었으나, 최근 무력제재는 핵기술의 발전으로 실패의 경우 손실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 따라서 향후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대안이 발견되지 않는 한, 경제제재의 활용 빈도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 사례 소개

가. 유엔의 다자제재

- 유엔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특정 국가 혹은 집단에게 경제제재를 부과해왔음.
- 유엔이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관련 국가나 집단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근거는 유엔헌장 7장 39조에서 41조까지의 조항에서 찾아볼 수 있음.¹⁰⁾
 - 유엔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 발생 시 평화와 안전을 유지 또는 회복하기 위해 잠정조치로서 비군사적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더불어 유엔헌장 25조와 103조는 모든 회원국들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을 이행할 의무를 가지며, 다른 국제협정상의

10)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39. <http://www.un.org/en/sections/un-charter/introductory-note/index.html> (검색일: 2016. 3. 14). The Security Council shall determine the existence of any threat to the peace, breach of the peace, or act of aggression and shall make recommendations, or decide what measures shall be taken in accordance with Articles 4 and 42, to maintain or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rticle 40: In order to prevent an aggravation of the situation, the Security Council may, before making the recommendations or deciding upon the measures provided for in Article 39, call upon the parties concerned to comply with such provisional measures as it deems necessary or desirable. Such provisional measures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claims, or position of the parties concerned. The Security Council shall duly take account of failure to comply with such provisional measures; Article 41: The Security Council may decide what measures not involving the use of armed force are to be employed to give effect to its decisions, and it may call upon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to apply such measures. These may include complete or partial interruption of economic relations and of rail, sea, air, postal, telegraphic, radio, and other means of communication, and the severance of diplomatic relations.

의무와 상충되는 경우 제재이행 의무(‘결의’일 경우)가 우선함을 명시하고 있음.¹¹⁾

□ 일반적으로 유엔을 통한 다자경제제재는 국가 간의 적대적 행위, 내전 등 내부 불안, 국제인권법의 위반행위, 민주주의 원칙 위배, 국제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확산 행위 등에 적용됨.

- 구체적인 제재 수단으로는 무역제재와 금융제재 등 일반적인 수단과 유사하나, 1990년대부터 표적제재(targeted sanctions 혹은 smart sanctions)를 도입하여 제재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특징을 지님.
- 표적제재의 도입은 경제제재가 대상국의 경제적 손실을 입히더라도 이는 대상국 내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킬 뿐 최고 권력층의 의사결정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됨.
- 최근까지 유엔 다자제재의 대부분은 ‘선별적 손상(discriminate damage)’의 방법으로 외교적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표적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음.¹²⁾

11) Charter of the United Nation Article 25. <http://www.un.org/en/sections/un-charter/introductory-note/index.html> (검색일: 2016. 3. 14).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gree to accept and carry out the decisions of the Security Council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Charter; Article 103: In the event of a conflict between the obligations of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under the present Charter and their obligations under any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their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harter shall prevail.

12) 박지연, “유엔의 스마트제재 연구.” 『국가전략』, 제 21권, 1호, 2015, p. 82.

〈표 1〉 유엔의 스마트제재 사례 (1992~2012)

대상 (제재횟수)*	관련 안보리 결의안	조치내용
알카에다/탈레반 (4회)	1267 1214 1333 1368 1373 1390 1989 1988	항공운항금지, 자산동결, 개인여행제한, 무기금수
앙골라 (4회)	851 864 1127 1130 1135 1173 1221 1237 1295	항공운항금지, 자산동결, 개인여행제한, 무기금수, 다이아몬드 및 석유제품 금수
코트디부아르 (5회)	1528 1572 1584 1643 1727 1962 1975 1980 2045	자산동결, 개인여행제한, 무기금수, 다이아몬드 금수
북한(2회)**	1695 1718 1874	무기금수, 항공과 선박운항금지, 사치품금수, 자산동결
콩고(4회)	1493, 1533, 1596, 1649, 1698, 1807, 1857, 2021	무기금수, 자산동결
에디오피아(1회)	1177	무기금수
구유고슬라비아 (2회)	713, 724, 752, 727, 887, 820	무기금수, 포괄제재동반
비사우(1회)	2048	여행제한
아이티(5회)	841, 861, 873, 875, 917, 940	원유·무기금수, 자산동결, 포괄제재 동반
이란(4회)	1696, 1737, 1747, 1803,	미사일관련제품 금수, 금융 제재, 무기금수, 여행제한
이라크(2회)	1483, 661, 1518	무기금수, 자산동결
코소보(1회)	1160	무기금수
레바논(1회)	1559, 1636, 1644, 1686, 1748, 1815	자산동결

12 국제사회 대북 경제제재의 현황과 이행 평가

대상 (제재횟수)*	관련 안보리 결의안	조치내용
리베리아(5회)	788, 985, 1071, 1343, 1478, 1521, 1532, 1689, 1753, 1903	무기·다이아몬드 금수, 여행제한
리비아(6회)	731, 748, 883, 1192, 1506, 1970, 1973, 2009, 2016, 2017, 2040	무기금수, 여행제한, 항공운항금지, 자산동결
르완다(2회)	918, 955, 1011	무기금수
시에라레온(5회)	1132, 1156, 1162, 1171, 1260, 1270, 1299, 1306, 1315, 1343, 1346	여행제한, 원유·무기· 다이아몬드 금수,
소말리아(5회)	733, 751, 794, 954, 1407, 1425, 1407, 1425, 1844, 1856, 1907, 2023, 2036, 2073, 2077	포괄적인 무기금수, 여행제한, 자산동결, 석탄금수,
수단(4회)	1054, 1070, 1372, 1564, 1591, 1593	무기금수, 여행제한, 항공운항금지
탈레반(2회)	1988, 1989, 1267	자금동결, 여행제한, 무기금수

* 주1: 제재 횟수는 TSC database 제재 에피소드 분류기준(제재목적 변화, 제재내용의 결정적인 변화 등)에 따라 계산, 따라서 단순 기간 연장 혹은 일부 미미한 제재 내용 변경 등의 경우 제재 결의안이 추가되더라도 새로운 제재 에피소드로 추가 되지 않음.

** 주2: TSC database는 대북제재의 경우 2009년 6월 결의안 1874호 까지만을 다루고 있음.

자료: 박지연, “유엔의 스마트제재 연구.” 『국가전략』, 제 21권, 1호, 2015, p. 84.

- 유엔은 언론성명, 의장성명, 결의 등을 활용하여 다자제재를 발의함.
 - 언론성명(Press Statement)은 안보리 이사국이 의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관련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는 형태이며 통상적으로 정치적 의미는 없음.
 -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의 경우는 이사국들이 합의를 통해 문서를 도출하며 도출된 문서에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됨.¹³⁾
 - 다만, 실천의지는 ‘결의’와 비교해 약함.
 - 결의(Resolution)란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 등 총 15개 국가들 중 9개국의 찬성(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적용)으로 채택되며 모든 회원국에게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짐.¹⁴⁾
- 양극체제에서는 미국과 소련 간의 갈등으로 유엔 내에서의 제재결의 채택이 상대적으로 어려웠으나, 탈냉전 이후 결의안 채택을 통한 제재 발의가 새로운 외교적 수단으로 활발히 도입되어옴.
 - 유엔은 2015년까지 약 400여건의 결의안 채택을 통해 경제제재를 발의해왔으며, 현재 15개의 제재위원회(sanctions committees)가 운영 중에 있음.¹⁵⁾
- 그러나 유엔이 발의해온 다자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임.

13) 일반적으로 의장성명에는 demand, call upon 등 권고적 용어가 사용된다.

14) 일반적으로 결의에는 decide, shall 등을 사용하여 더욱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

15) 유엔 제재위원회. <https://www.un.org/sc/suborg/en/sanctions/information> (검색일: 2016. 3. 14).

□ 상대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제재 사례로는 유엔의 대 앙골라 제재와 대 리비아 제재를 들 수 있음.

- 이들 사례들을 살펴보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안 부과와 더불어 적극적인 제재이행이 필수적이며, 경우에 따라 무력제재가 동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결의안 이행의 강제력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무력수단 도입을 지양하는 현재 유엔의 다자제재의 기본적인 성격을 고려할 경우, 유엔의 제재가 실효성의 측면에서 의의를 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더욱이 유엔의 다자제재는 구조적으로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첫째, 유엔의 제재 결의안은 주로 상임이사국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제안되며, 강대국들 간의 타협에 의해 결의된다는 지적에서 자유롭기 어려움.¹⁶⁾

○ 제재 대상국인 이란과 북한은 물론 일부 비동맹국가들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는 차별적으로 이란과 북한에게만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일부 강대국의 이중기준이 적용되는 사례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음.¹⁷⁾

- 둘째, 제재안이 확정되더라도 회원국들의 신속하고 철저한 이행에는 한계가 있음.

16) Doxey, Margaret, "Reflections on the sanctions decade and beyond," *International Journal*, Vol. 64, No. 2, 2009, pp. 539-549.

17) 임갑수·문덕호, 『유엔 안보리 제재의 국제정치학』, 한울, 2013, pp. 111-112.

- 특히 회원국들이 제재이행의 강력한 의지를 가진다 할지라도 각 회원국들은 국내법 혹은 하위 규정 등을 수립하는 등의 제재이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야 구체적인 제재 이행이 가능해짐.
- 그런데 이러한 제재 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일정 시일이 소요되며¹⁸⁾, 이는 제재의 실효성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더구나 제재 인프라 구축 역량은 회원국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체적인 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은 이행 의지와 별개로 다양한 한계에 부딪히게 됨.
- 셋째, 유엔의 다자제재는 제재의 효과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제재 모니터링이 쉽지 않음.
- 다양한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다자제재의 경우 제재안 합의와 마찬가지로 제재 모니터링의 방법과 결과 활용에 대한 합의가 어렵기 때문임.
- 기본적으로 제재 이행에 대한 보고가 강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보고서 제출률은 매우 낮음.¹⁹⁾

18)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의 경우 안보리 결의 채택 후 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최소 6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Portela, Clara, "National implementation of United Nations sanctions," *International Journal*, Vol 65, No. 1, 2009. pp. 13-30.

19) 예를 들어 2006년 이후 네 차례 채택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는 유엔 회원국들이 3개월 마다 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2014년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호주, 덴마크, 요르단, 몽골, 필리핀, 영국 등 단 6개 국가이며, 2006년부터 최근까지 유엔이 결의한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최소 한 차례 이상 제출한 나라는 모두 97개국으로 192개의 유엔 회원국 가운데 절반에 불과하다.

- 또한 유엔은 발의한 경제제재 중 일부에 대하여 제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부 제재위원회를 통해 전문가패널보고서를 생산하나 패널보고서의 결과나 활용 또한 일부 국가의 서명 거부, 경우 공개나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짐.²⁰⁾

〈참 고〉

성공사례 1: 앙골라

제재목적 : 내전종식

제재기간 : '93~'02 약 9년 3개월

제재내용 : 총 9개의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4차례의 제재 발의

제재수단 : 내전을 주도하는 특수 집단(UNITA)에 대한 무기금수, 원유 및 다이아몬드 수입금지, 여행제한, 해외 사무소 폐쇄, 해외자금 동결 등

성공요인 : 패널보고서 작성 및 공개 → 초기 비협조적이었던 유관국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성공사례 2: 리비아

제재목적 : 테러방지 및 핵비확산, 민주주의 수립

제재기간 : '92~현재

제재내용 : 총 11개의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6차례의 제재 발의

제재수단 : 무기금수, 원유 수입금지, 여행제한, 해외 사무소폐쇄, 해외자금 동결 등

성공요인 : (경제 구조) 원유수출의 높은 의존도 → 장기간 피해 확산 → 국내정치 불안 (무력제재 동반) 다국적군 리비아 공습 등

20) 2010년 북한제재위원회 패널보고서의 경우 특정 국가 출신의 전문가패널 위원의 서명 거부로 제출은 되었으나 공개되지 못한 바 있다.

나. 미국의 양자제재

- 미국은 의회가 외국과의 상업을 규율할 수 있다는 헌법상의 규정에 따라 제재법을 제정할 수 있음.
 - 행정부는 의회가 정한 법률에 따라 행정명령을 활용하여 경제 제재를 부과함.
- 비핵확산을 위한 수출 통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을 살펴보면,
 - 해당 법률에 따르면 제재 대상국은 정부 조달금지, 원조금지, 특정 군수품 판매금지, 특정 이중용도 물품 수출인가 거부 등을 부과할 수 있음.²¹⁾
- 애국법은 미국의 관할권 밖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을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여 미국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외국 금융기관의 대리계좌와 환계좌의 개설내역거래내역 등 관련 정보 수집과 보고의 의무를 부과하며, 해당 외국 금융기관의 대리계좌와 환계좌의 개설을 금지하고 유지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령임.²²⁾
- 대외원조법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일관된 형태로 관여하는 국가의 정부에 대한 안보 관련 지원을 금지하는 법령으로 미국은 해당 법령에 따라 모든 공산국가에 대한 대부분의

21) U.S. Department of State Diplomacy in Action, Iran, North Korea, and Syria Nonproliferation Act Sanctions, <http://www.state.gov/t/isn/inksna/> (검색일: 2016. 6. 8).

22)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Overview of Section 311 of the USA PATRIOT Act, <https://www.treasury.gov/press-center/press-releases/Pages/tg1056.aspx> (검색일: 2016. 6. 8).

비인도적인 대외원조 제공을 거부해왔음.²³⁾

- ☐ 그 외 적국과의 교역을 금지하거나 적국에 대해 높은 세율 적용하는 적성국교역법 등이 있음.²⁴⁾
- ☐ 한편 미국 경제제재의 대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기준과 유사하며 대표적으로 대테러, WMD, 인권, 민주주의 복원 등에 적용됨.
- ☐ 경제제재 부과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재무부와 상무부이며, 각각 하위기관 및 기타 기관을 통해 무역제재와 금융제재 발의하고 이행을 감독함.
 - 먼저 재무부는 해외자산통제실을 통해 제재를 부과하며, 해당 제재들은 적성국교역법, 국가긴급경제권한법, 대외원조법, 수출관리법 등에 기반을 둠.
 - 재무부가 부과하는 제재의 종류로는 수출과 재수출의 금지, 수입금지, 금융거래 금지, 여행금지, 원조금지 등이 있음.
 - 해외자산통제실은 제재 부과를 위해 블랙리스트를 운영하는데, 해당 리스트에 포함된 개인이나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들은 해당자 혹은 기관들과 거래가 불가능하게 됨.
 - 경우에 따라 해당 리스트에 속한 개인이나 기업이 이의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이 기각됨.²⁵⁾

23)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U.S. 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 <http://www.cfr.org/foreign-aid/us-foreign-assistance-act-1961/p27046> (검색일: 2016. 6. 8).

24)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TRADING WITH THE ENEMY ACT OF 1917, <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Documents/twea.pdf> (검색일: 2016. 6. 8).

25) 임갑수·문덕호, 『유엔 안보리 제재의 국제정치학』, 한울, 2013. p. 278.

- 다음으로 상무부는 수출통제를 담당함.

- 특히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수출관리령을 시행하여 WMD 개발로 전용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이중용도 물자와 기술을 포괄적으로 통제하고 있음.²⁶⁾
- 통제의 원칙은 1) 상품통제리스트와 위험도에 따라 분류한 국가도표를 참조, 선적하려는 품목과 최종사용자가 소재하는 국가가 통제대상일 경우에는 수출과 재수출이 금지되며,
- 2) 외국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통제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기술에 미국 성분이 최소 기준 이상 포함될 경우에는 해당 외국제품의 제 3국으로의 수출과 재수출이 금지되고,
- 3)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기술, 시설을 직접 이용하여 제조된 외국제품일 경우에도 특정 국가나 측정 최종사용자로의 재수출과 수출이 금지됨.²⁷⁾

- 상무부와 재무부 이외 국무부 방산물자관리실²⁸⁾과 비확산실²⁹⁾, 에너지부 원자력규제위원회³⁰⁾ 등도 제재 부과를 담당하는 기관임.

26)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https://www.bis.doc.gov/index.php/regulations/export-administration-regulations-ear> (검색일: 2016. 6. 8).

27) 임갑수·문덕호, 『유엔 안보리 제재의 국제정치학』, 서울: 한울, 2013, pp. 278-279.

28) U.S. Department of State, 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s, <https://www.pmddtc.state.gov/ECR/index.html> (검색일: 2016. 6. 8).

29) U.S. Department of State Diplomacy in Action, Office of Missile, Biological, and Chemical Nonproliferation, <http://www.state.gov/t/isn/151025.htm> (검색일: 2016. 6. 8).

30) U.S. Department of Energy, Office of Nuclear Energy, <http://energy.gov/ne/office-nuclear-energy> (검색일: 2016. 6. 8).

□ 미국의 경제제재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이 대 이란 제재임.³¹⁾

- 1993년 미국은 이란제재법에 따라 석유자원개발에 연 2,000만달러 이상 투자한 기업, WMD, 재래식 무기 증강에 기여한 개인 및

〈표 2〉 미국의 대 이란 경제제재 요약

	제재 대상	제재 내용
이란 제재법 (1993년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에 연 2,0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기업 △ 이란의 대량살상무기(WMD), 재래식 무기 증강에 기여한 외국 개인 및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수출입은행의 대출, 차관, 신용보증 거부 △ 미국 군수기술의 이전 금지 △ 미국 은행의 연 1,000만 달러 이상 대출 금지 △ 미국 국채의 우선적 dealer 또는 정부자금 수탁자로서의 서비스 금지 △ 미국 정부 조달 금지 △ 대미 수출 금지
포괄적 이란 제재법 (2010년 7월)	<p>기존 대상에 다음을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서비스, 기술 제공으로 이란의 정제유 국내 생산에 기여한 경우 △ 이란에 정제유를 제공하거나 이란의 정제유 수입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관여한 경우 	<p>기존 제재에 다음을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내 외환시장 접근 금지 △ 미국 은행시스템 접근 금지 △ 미국 내 자산거래 금지

자료: U.S. Department of State Diplomacy in Action, Iran Sanctions. <http://www.state.gov/e/eb/tfs/spi/iran/index.htm> (검색일: 2016. 6. 8).

31) U.S. Department of State Diplomacy in Action, Iran Sanctions. <http://www.state.gov/e/eb/tfs/spi/iran/index.htm> (검색일: 2016. 6. 8).

기관에 대해 미국의 대출차관 및 신용보증 거부하고, 미정부 조달 금지, 대미 수출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 이후 2010년 포괄적 이란제재법에 따라 기존 제재 대상에 이란의 정제유 생산에 기여한 국내외 기업 혹은 개인, 정제유를 제공하거나 정제유 수입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에 관여한 국내외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기존 조치에 추가적으로 미국 내 외환시장 접근 금지, 미국 은행시스템 접근 금지, 미국 내 자산거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최근 이란의 핵개발이 잠정 동결되면서 순차적으로 제재 해제를 진행 중에 있음.
- 이러한 제재의 효과는 미국의 강력한 주도와 유엔이 7개의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대 이란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³²⁾
- 또한 EU가 2012년 이후 강력한 제재조치를 반복적으로 부과해온 결과이기도 함.
- 강력한 제재의 지속으로 대상국인 이란 뿐 아니라, 발의국 미국 및 유럽 각국들의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였음.

32) UNSCR 1737. https://www.iaea.org/sites/default/files/unsc_res1737-2006.pdf;
 UNSCR 1747. https://www.iaea.org/sites/default/files/unsc_res1747-2007.pdf;
 UNSCR 1803. https://www.iaea.org/sites/default/files/unsc_res1803-2008.pdf;
 UNSCR 1835. https://www.iaea.org/sites/default/files/unsc_res1835-2008.pdf;
 UNSCR 1929. https://www.iaea.org/sites/default/files/unsc_res1929-2010.pdf;
 UNSCR 1984.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S/RES/1984\(2011\)](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S/RES/1984(2011)); UNSCR 2049.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S/RES/2049\(2012\)](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S/RES/2049(2012)) (검색일: 2016. 6.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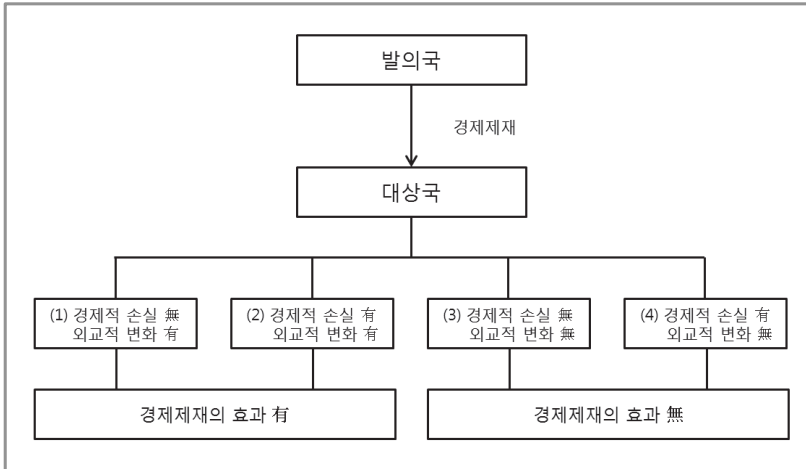
- 미국은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수출입 관련 1,350~1,750억 달러의 손실과 매년 약 6만개의 일자리 손실 등 기타 관련 산업으로부터의 세금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2년을 기준으로 독일은 약 500억 달러, 이탈리아는 약 300억 달러, 프랑스는 약 200억 달러 등의 손실이 발생하였음.³³⁾

3. 경제제재의 실효성 논의

- 경제제재의 실효성은 제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였는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기본적으로 경제제재의 목적은 대상국의 의사결정 변화를 유도하는 것임.
- 따라서 발의국이 부과한 경제제재는 대상국에 대한 경제적 실효성을 바탕으로 대상국의 의사결정 변화를 이끌거나(〈그림 2〉의 (2)), 경제적 실효성 유무와 상관없이 제재 위협으로 인해 대상국의 의사결정 변화를 유도할 경우(〈그림 2〉의 (1)) 제재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반면, 제재가 대상국 경제에 심각한 손실을 유발시키더라도 대상국의 의사결정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거나(〈그림 2〉의 (4)), 제재가 대상국 경제에 아무런 손실을 야기하지 못하고 북한의 의사결정 변화도 유도하지 못하는 경우(〈그림 2〉의 (3)) 경제제재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 할 수 있음.

33) National Iranian American Council, *Losing Billions*, National Iranian American Council, 2014.

〈그림 2〉 경제제재 효과 시나리오(예)



자료: 저자작성

□ 위와 같은 기본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여러 학자들은 다양한 기준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논의해왔음.

- 초기 대표적인 경제제재 연구 중 하나인 Wallenstein(1968)은 발의국의 경제제재 지속 여부를 기준으로 경제제재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음.³⁴⁾

○ 발의국이 경제제재를 멈추었다면 이는 성공한 경제제재이며, 경제제재를 지속하고 있다면 이는 실패한 경제제재라는 것임.

○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단 두 사례만을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경제제재가 발의되면서 동시에 경제제재가 철회되었다는 이유로 Wallenstein(1968)은 1933년

34) Wallenteen, Peter, "Characteristics of Economic Sanction,"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5, No. 3, 1968, p. 250.

영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와 1960년 미국의 대 도미니카 경제 제재만을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³⁵⁾

- Al-soyel(1999)은 Wallenstein(1968)의 경제제재 효과 측정의 방법은 대상국의 변화에 민감한 측정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후 다수의 학자들은 경제제재가 Wallenstein(1968)의 기준이 대상국의 상황과 무관하게 발의국 내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의해 종료될 수도 있다는 측면이 무시되었다고 비판해왔음.³⁶⁾

- 한편 1990년을 전후하여 경제제재의 효과를 직접적인 목적 달성의 정도에 따라 평가하기 시작하였음.

○ 목적이 완전히 달성된 경우에 경제제재의 효과는 매우 높은 것으로,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경우에 경제제재의 효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임.

- 이러한 평가기준에 따라 Hufbauer et al.(1985, 1990, 2007)은 20 세기 발의된 경제제재를 대상으로 그 효과를 지수화 하였으며, 최근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그들의 지수를 차용하고 있음.

○ 그들은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제제재의 목적 달성 정도와 더불어 경제제재의 기여 정도를 측정하여 혼합한 경제제재 성공 지수를 개발하기도 하였음.³⁷⁾

35) Wallenstein, Peter, "Characteristics of Economic Sanction,"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5, No. 3, 1968, p. 251.

36) Al-soyel, Dina, "Target Types and the Efficacy of Economic Sanctions," *Rice University Ph. D Dissertation*, 1999.

37) Hufbauer et al,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 3rd edition, pp. 49-50.

□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제재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어떠한 방식의 측정기법을 도입하더라도 제재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임.

- Galtung(1967)은 대상국은 저항체제를 구축하기 때문에 강력한 경제제재라도 실효적이기는 어렵다고 분석함.

○ 따라서 저항체제를 수립하기 이전에 제재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다면 실효성은 일정 수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함.³⁸⁾

- Knorr(1977)에 따르면 경제제재의 낮은 실효성은 대부분의 제재 대상국들이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연관성(trade linkage)이 낮아 제재에 따른 예상손실이 작기 때문인 반면 제재의 요구사항은 국가 혹은 정권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함.³⁹⁾

- 다음으로 Gilpin(1977)은 무역 상대국이 다양화된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경제제재의 효과는 높지 않은데 대부분의 경제제재 대상국들이 발의국가와만 무역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의 실효성은 낮을 가능성이 높음.⁴⁰⁾

- Doxey(1987)의 경우는 정치체제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제재의 효과를 논의하고 있는데, 경제제재 대상국이 독재국가라면

38) Galtung, Johan, "On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With Examples from the Cases of Rotheresia," *World Politics*, Vol. 19, No. 3, 1967.

39) Knorr, Klaus, "International Economic Leverage and its Uses," in Knorr, Klaus and Frank Trager eds, *Economic Issues and National Security*, KANSAS: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77, p.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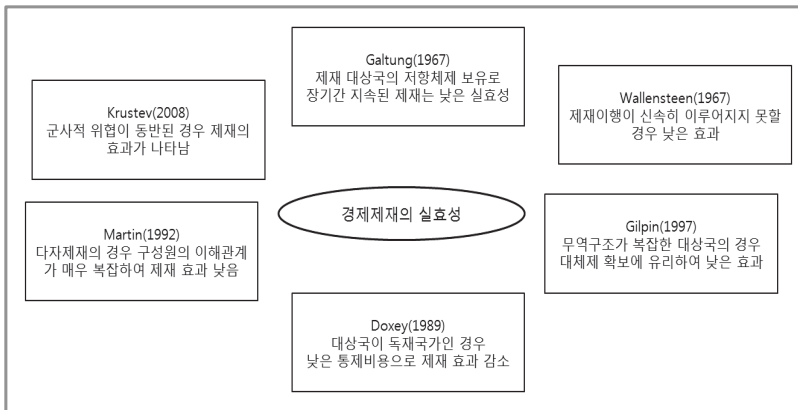
40) Gilpin, Robert, "Economic Independence and National Security in Historical Perspectives," in Knorr, Klaus and Frank Trager eds, *Economic Issues and National Security*, KANSAS: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77.

언론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제재에 대한 저항의 비용이 높지 않게 되며, 따라서 대상국이 제재에 대한 저항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고 주장함.⁴¹⁾

- Martin(1992)은 경제제재가 집단적으로 발의되었는가 혹은 단독으로 발의되었는가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분석하고 있음.

○ 일반적인 경우 집단적으로 발의된 경제제재가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집단의 응집력(cohesion)에 따라 그 효과가 단독으로 발의된 경제제재보다 낮을 수 있다는 것이 Martin (1992)의 분석임.⁴²⁾

〈그림 3〉 경제제재의 실효성 관련 주요 논의 요약



자료: 저자작성

41) Doxey, Margaret, *International Sanctions in Contemporary Perspectiv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7.

42) Martin, Lisa, *Coercive Cooperation: Explaining Multilateral Economic Sanc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마지막으로 Krustev(2008)는 군사적 위협이 동반된다면 경제 제재는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⁴³⁾
- 한편 경제제재가 대상국의 경제적 손실을 입히더라도 이는 대상국 내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킬 뿐 최고 권력층의 의사결정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관찰되었음.
- 특히 대 이라크 경제제재의 경우, 제재 이후 5년간 가구당 월간 식료품비용이 250배 상승했으며, 식량부족으로 인해 최소 10만 명에서 최대 23만 명에 달하는 영아가 사망한 것으로 분석되었음.⁴⁴⁾
- 더욱이 이라크 내 경제제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인명피해보다 심각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된 바 있음.⁴⁵⁾
-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인의 집권은 상당기간 지속되었으며, 후세인은 2003년이 되어서야 미국의 무력제재를 통해서 축출되는데,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990년대부터 국제사회는 ‘포괄적인 제재(comprehensive sanctions)’의 ‘무분별한 피해(indiscriminate damage)’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적제재를 도입하기 시작했음.⁴⁶⁾
- 표적제재의 실효성은 최근 여러 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

43) Krustev, Valentin, *Bargaining and Economic Coercion: The Use and Effectiveness of Sanctions*, VDM Verlag, 2008.

44) 노엄 촘스키 외, 『미국의 아라크 전쟁: 전쟁과 경제제재의 참상』, 북막스, 2002.

45) Mueller and Mueller, "Sanctions of Mass Destruction," *Foreign Affairs*, Vol. 78, No. 3, 1999, p. 51.

46) 박지연, "유엔의 스마트제재 연구," 『국가전략』, 제 21권, 1호, 2015, p. 82.

- Bondi(2002)는 무기금수가 무력충돌에 사용되는 특정 무기에 대한 통제만을 제안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지 않고서도 대상국 내부에서의 무력갈등을 완화시키는 것에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함.

○ Bondi(2002)에 따르면, 무기금수는 특히 내전중단에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스마트제재가 될 수 있음.⁴⁷⁾

- Elliott(2002)에 따르면, 여행제한은 비자발급 제한 등과 같은 개인 수준의 여행제한은 표적제재로 유용하게 도입되고 있음.

○ 개인수준의 여행제한은 관련자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지는 못하지만, 외부와의 단절이라는 외교적, 심리적 고립이라는 비용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표적제재로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⁴⁸⁾

- Reid et al.(2002)는 표적제재가 상대적으로 나은 선택이기는 하지만, 신속한 이행이 전제되지 못할 경우, 일반 경제제재와 마찬가지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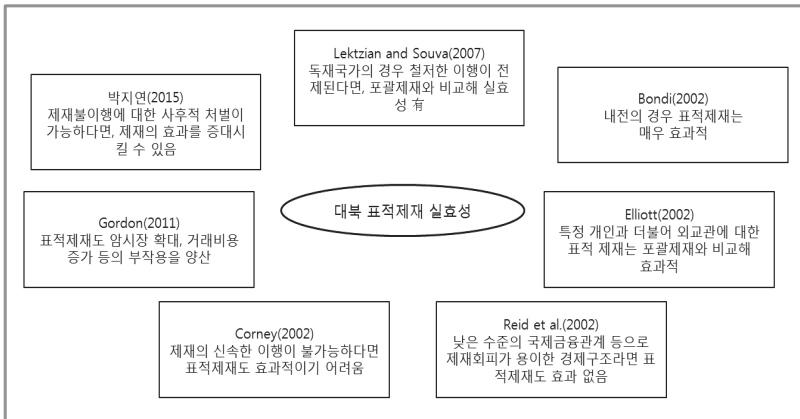
○ 특히 금융제재의 경우 제재가 신속히 이행되지 못할 경우 차명계좌 사용 등의 방법으로 제재를 피해갈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받고 있음.⁴⁹⁾

47) Bondi, Loretta, "Arms Embargoes: Is Name Only?" in David Cortright and George Lopez, eds. *Smart Sanctions*, Mayland: Rowman & Littlefield, 2002, p. 109.

48) Elliott, Kimberly, "Analyzing the effects of targeted sanctions," in David Cortright and George Lopez, eds. *Smart Sanctions*, Mayland: Rowman & Littlefield, 2002, p. 172.

49) Reid et al, "Targeted Financial Sanctions," in David Cortright and George Lopez, eds. *Smart Sanctions*, Mayland: Rowman & Littlefield, 2002, pp. 41-64.

〈그림 4〉 표적제재의 실효성 관련 주요 논의 요약



자료: 저자작성

- 유사한 분석으로 Corney(2002)는 표적제재가 실제 제재 대상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도록 디자인하였더라도 이것이 적절히 이행되지 못할 경우 제재 대상에게 아무런 손실을 발생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제재의 의도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음.⁵⁰⁾
- Gordon(2011)의 분석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포괄적 제재보다는 스마트제재가 대상국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적절하지만 표적제재도 경우에 따라 대상국의 인권유린을 완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함.
- 예를 들어 대량살상무기 금수조치는 내부 경량무기 개발에 촉매제가 되며, 비교적 공급이 용이한 경량무기는 대다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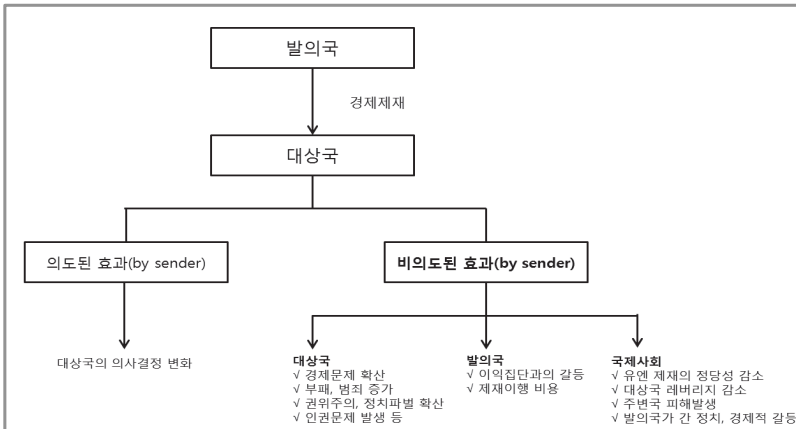
50) Corney, Richard, "The UN Experience with Travel Sanctions," in David Cortright and George Lopez, eds, *Smart Sanctions*,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2002, pp. 145-170.

주민들에게 공급되고, 이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임.⁵¹⁾

- 박지연(2015) 또한 표적제재의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포괄 제재와 마찬가지로 제재 불이행에 대한 사후적 처벌이 존재한다면 제재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나, 특히 다자제재의 경우 사후적 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재의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음.⁵²⁾

□ 일부 연구에서는 경제제재의 낮은 실효성의 한계와 더불어 오히려 경제제재가 대상국의 정치, 경제적인 안정에 기여하는 일종의 비의도적 효과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주장하기도 함.

〈그림 5〉 경제제재의 비의도적 효과(예)



자료: 저자작성

51) Gordon, Joy. "Smart Sanctions Revisited," *Ethnicity & International Affairs*, Vol. 25, No. 3, 2011, pp. 315-335.

52) 박지연, "유엔의 스마트제재 연구," 『국가전략』, 제 21권, 1호, 2015, pp. 102-103.

- 여기서 경제제재의 비의도적 효과란 대상국의 의사결정 변화 등의 의도적인 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작용 등을 의미함.⁵³⁾
- 경제제재의 비의도된 효과는 1) 대상국의 측면에서 경제문제의 확산, 부패 및 범죄의 증가, 권위주의 및 정치파벌의 확산, 인권문제 발생 등이 있음. 2) 발의국의 측면에서는 발의국 내 이익집단과 발의국 정부 간의 갈등 등이 있으며, 3) 국제사회의 측면에서는 유엔제재의 정당성 감소, 대상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레버리지 감소, 대상국의 주변국과의 마찰 발생, 발의국가들 간의 정치, 경제적 갈등 발생 등이 있음.
- 경제제재는 대상국 국민들에 대한 경제적 손상을 유발하고, 이들이 정책결정권자의 정책변화를 강제하여 최종적으로 외교적 행위를 바꾸게 하는 메커니즘을 기본으로 함.
- 그런데 이러한 메커니즘은 한 국가의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되거나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권력이 다양한 이익집단의 압력에 영향을 받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대될 수 있는 현상임.
- Allen(2008)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발의된 경제제재의 78% 이상이 비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제재 효과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음.⁵⁴⁾

53) Eriksson, Mikael,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United Nations targeted sanctions," in Biersteker et al. eds. *Targeted Sanc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pp. 190-219.

54) Allen, Susan,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Sanctions Success and Failure,"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31, No. 2, 2005, pp. 117-138.

- 심지어 Wintrobe(1990), Mesquita 외(2003)는 경제제재가 비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발의된 경우에는 제재가 오히려 대상국의 독재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함.⁵⁵⁾

○ 경제제재 때문에 외부 유입이 차단된 물품에 대하여 대상국의 권위주의 지도자는 자기를 추종하는 집단에 해당 물품을 밀수할 수 있는 지대추구(rent seeking)의 기회를 분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임.⁵⁶⁾

○ 이러한 지대추구에 대한 배분 권한이 커지면서 오히려 비민주적 리더의 권력은 강화될 수 있음.

○ 물론 이러한 상황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증가시켜 노약자의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권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음.

□ 기존 논의를 살펴본 결과, 실효적인 제재는 존재할 수 있음.

- 다만,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것은 명확해 보임.

- 경제제재가 높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함.

○ 기본적으로 제재 대상국은 민주주의 국가여야 하며, 대외 경제관계가 매우 긴밀하게 형성되어있어야 할 뿐 아니라, 발의국과 미래갈등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야 함.

55) Wintrobe, Ronald "The Tinpot and the Throat of the Na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2, 1990, pp. 849-872; Mesquita, Bruce Berno et al, *The Logic of Political Survival*, Cambridge, MA: The MIT Press, 2003.

56) 박지연, "유엔의 스마트제재 연구," 『국가전략』, 제 21권, 1호, 2015, p. 88.

- 더불어 발의국은 독재국가이어야 하며, 다른 국가들과 연합하여 제재를 부과하기 보다는 단독으로 제재를 발의함으로써 제재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III

국제사회 대북 경제제재의 현황

1.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

- ☐ 유엔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여 안보리 결의 1718호, 안보리 결의 1874호, 안보리 결의 2094호, 안보리 결의 2770호 등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북 경제제재를 이행하고 있음.
- ☐ 먼저, 유엔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2006.10.9)에 대한 대응으로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2006.10.14)하였음.
- ☐ 안보리 결의안 1718호는 1) 핵실험 선언 규탄(1항)하고, 2)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 발사 시행 중단(2항), 3) NPT 탈퇴발표를 철회(3항), 4) NPT 및 IAEA 안전조치로 복귀(4항), 5)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 중단(5항), 6) IAEA에 의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무기 및 현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6항), 7) 여타 현존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7항) 등을 요구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은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고 중국, 북한, 일본, 한국, 러시아 및 미국에 의해 발표된 9.19 공동 성명(2006.9.19)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 받음 (14항).

□ 경제제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금수조치로서 1) 유엔 채택식무기 등록제도상 목적으로 정의된 모든 탱크, 장갑전투차량, 대구경 대포, 군용항공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또는 미사일 시스템, 또는 이와 관련된 부속품을 포함한 물자와 안보리 또는 제재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는 물자 (8항-(a)- i), 2) 핵 또는 탄도미사일 또는 여타 WMD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품목, 물자, 장비, 상품, 기술(8항-(a)- ii), 3) 사치품(8항-(a)-iii) 등이 그 원산지와 관계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북한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8항-(a)), 북한은 위 언급된 모든 물품의 수출을 중지해야 함(8항-(b)).

- 둘째, 화물검색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제재 품목을 북한으로 이전하는 것과 북한으로부터 이전받는 것을 금지해야 함(8항-(a), 8항-(b)).

○ 이행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은 자국 법령에 따라 그리고 국제법에 부합하게 북한행 및 북한발 화물 검사 등 협력조치를 필요에 따라 취할 것을 요청받고 있음(8항-(f)).

- 셋째, 금융 및 자산동결 관련 제재로서 모든 회원국은 각국의 개별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제재위원회 또는 안보리에 의해서 불법적

방법을 포함하여 북한의 핵, 여타 WMD 그리고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연루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지정된 개인, 단체 또는 이들의 대리인 또는 하수인들이 동 결의 시점 및 그 이후 직·간접적으로 보유 또는 통제하는 자국 영토내의 자금, 여타 금융 자산 및 경제자원을 즉각 동결하고, 자국인 또는 자국 영토내 개인이나 단체가 상기 개인이나 단체들이 자금, 금융자산 또는 경제 자원을 사용하게끔 하거나 동 자원들이 이들에 이득이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8항-(d)).

○ 단, 1) 기본 지출 또는 전문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불된 적정수준의 비용, 법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변제, 동결자산·여타 금융자산 및 경제적 자원의 보유와 유지를 위해 각국 국내법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 및 서비스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관련국들이 동 자금, 여타 금융자산 및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하고자 하는 의사를 제재위에 통보하고, 동 통보 후 5일내(근무일 기준) 반대결정이 부재한 경우,

○ 2) 특수 비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그러한 결정이 관련국들에 의해서 제재위에 통보되고 안보리에 의해 승인된 경우,

○ 3) 법적, 행정적 및 중재적 선택특권 또는 판결 대상으로서, 이러한 경우에 자금, 여타 금융자산, 경제자원이 선택특권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사용될 여지가 있는 경우(단, 이 결의의 효력 발생 전에 성립된 사안)는 자산동결의 예외로 함(9항).

- 넷째 WMD 관련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로서 회원국은 북한의 정책을 지원 또는 촉진시키는 등 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정된

개인 및 그 가족의 자국 영토 입국이나 경유 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함(8항-(e)).

○ 다만 제재위원회가 해당 여행이 종교적 의무를 포함한 인도적 사유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사안별로 결정하거나, 제재위원회가 예외의 불인정은 결의의 목적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10항).

- 제재의 이행과 관련하여 모든 회원국이 결의 채택 후 30일 이내에 제재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들에 관해 안보리에 보고 하도록 요청받음(11항).

- 특히 북한 제재위원회는 1) 제재에 언급된 품목, 물자, 장비, 상품 및 기술 생산국 또는 보유국들로부터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각국이 취한 조치 관련 정보 및 이러한 관점에서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2)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 위반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고, 3) 예외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결정함.

- 또한 4) 제재의 추가적인 품목, 물자, 장비, 상품, 기술을 결정하며, 5) 제재 조치의 대상이 되는 개인 및 단체를 지정하고, 6) 결의에서 부과한 조치의 이행 촉진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함.

- 마지막으로 최소한 매 90일마다 제재조치의 효율성 강화 방안 등 관찰 및 권고를 포함한 위원회의 작업에 관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음(12항).

□ 다음으로 유엔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2009.5.25)에 대한 대응으로 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2009.6.12)하였음.

- 안보리 결의안 1874호는 1) 북한의 유엔 결의들에 대한 위반을 규탄(1항)하고, 2)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중지(2항), 3)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3항), 4)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이행(4항), 5) NPT 탈퇴 선언을 즉각 철회(5항), 6) 조속한 시일 내 NPT 및 IAEA 안전조치에 복귀(6항), 7)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8항)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 한편 결의안은 북한이 6자회담에 전제조건 없이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9.19 공동성명(2006.9.19), 2.13 및 10.3 공동 문건(2007)을 완전하고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하고 있음(30항).
- 경제제재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모든 회원국들이 기존 결의안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7항).
 - 구체적으로는 첫째, 금수조치로서 북한은 모든 무기와 관련 물품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기 또는 물품의 공급, 제조, 정비 또는 사용과 관련된 금융 거래, 기술 훈련, 자문, 역무 또는 지원을 금지해야 하며(9항), 회원국은 소형무기와 관련한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무기와 관련 물품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기의 공급, 제조, 정비, 사용과 관련된 금융 거래, 기술 훈련, 자문, 역무 또는 지원도 금지해야 함(10항).
 - 단, 회원국들이 북한에게 소형무기를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데 대해 주의하도록 촉구하고, 북한에 대한 소형무기의

판매, 공급, 이전시 최소한 5일전에는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결정함(10항).

- 둘째, 화물검색과 관련하여 금지된 품목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 모든 북한행 및 북한발 화물을 검색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11항), 공해상에서 기국의 동의하에 선박을 검색하도록 촉구하고 있음(12항).

○ 만약 기국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항구로 유도하여 검색하며(13항), 금지품목 발견 시 국제법에 따라 압류, 처분 후 제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되어있음(14항, 15항).

○ 또한 만약 압류나 처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사항을 제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16항), 의심선박에 대한 연료공급 등 지원서비스가 금지됨(17항).

- 셋째, 금융 및 자산동결 관련 제재로서 먼저 핵·탄도미사일·여타 WMD와 관련된 활동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서비스의 제공이나, 어떠한 금융 및 여타 자산 또는 재원의 이전을 금지하도록 촉구함(18항).

○ 또한 무상원조, 금융 지원, 양허성 차관 계약을 신규 체결하지 않고, 기존 계약은 줄여 나가도록 주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함(19항).

○ 단, 인도주의 또는 개발상의 목적이나, 비핵화 증진의 경우는 제외함(19항).

○ 다음으로 북한과의 무역을 위한 공적 금융 지원(자국 국민

또는 이러한 무역과 연관된 단체에 대한 수출신용, 보증, 또는 보험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촉구함(20항).

- 넷째 기타 제재로서 결의안은 단체, 물품, 개인들의 지정은 제재 위원회가 결의 채택 후 30일 이내에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있음(24항).

- 더불어 북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확산 민감 핵활동과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 관련 특수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관해 주의하도록 촉구함(28항).

- 제재의 이행과 관련하여 모든 회원국들은 동 결의가 채택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들에 대해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음(22항).

-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 제재위원회는 결의의 완전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25항), 더불어 1년 임기의 전문가 그룹을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26항).

- 전문가 그룹은 1) 1718호에 명시된 위원회의 임무와 금번 결의 26항에 명시된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조력하며(26항-(a)),

- 2) 특히, 불이행 사례 등 1718호와 동 결의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들의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국가, 관련 유엔 기관 및 여타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수집, 조사, 분석하고(26항-(b)),

- 3) 안보리, 위원회 및 회원국들에게 조치들을 권고하며, 1718호와 금번 결의에 따라 부과된 조치의 이행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함(26항-(c)).

- 또한 4) 결의가 채택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안보리에 중간 보고서와, 임무 종료 30일 이전에 안보리에 결과 및 권고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음(26항-(d)).
- 유엔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2013.2.12)에 대한 대응으로 안보리 결의안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2013.3.7)하였음.
- 안보리 결의안 2087호는 1) 북한의 유엔 결의들에 대한 위반을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1항)하고, 2)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중지(2항), 3) NPT 탈퇴 선언을 즉각 철회(3항), 4) 조속한 시일 내 NPT 및 IAEA 안전조치에 복귀(4항), 5)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5항), 6)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6항)을 요구하기 위해 채택되었음.
- 한편 결의안은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동 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며, 모든 참가국들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북한,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이 발표한 9.19 공동성명(2006.9.19)을 완전하고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하고 있음(34항).
- 더불어 북한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조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들(further significant measures)을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하고 있음(36항).

□ 경제제재의 내용은 첫째, 금수조치로서 기존의 품목 및 행위의 범위를 모두 포함하며, 금지 품목의 조달, 유지 또는 사용을 다른 국가에서 주선하는 것이나, 다른 국가에 대한 공급, 판매 또는 이전, 또는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출을 주선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중개 또는 여타 매개 서비스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7항).

- 또한 사치품의 구체적인 항목이 부속서에 별도로 명시되어있으며, 제재 품목이 명시된 품목에 한정되지는 않음을 밝히고 있음(23항 부속서 IV).

- 둘째, 화물검색과 관련하여 북한발 또는 북한행 모든 화물, 또는 북한이나 북한 국민, 또는 북한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중개하였거나 이전을 촉진한 모든 화물에 대하여, 신뢰할 만한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 동 화물을 검색할 것을 결정함(16항).

○ 만약 어떠한 선박이 그 선박의 기국에 의해 검색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검색을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북한 국적 선박이 검색을 거부할 경우, 모든 국가들이 동 선박에 대해 자국 항구로의 입항을 거부할 것을 결정하며, 선박에 의해 검색을 거부당한 국가들은 동 사건을 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할 것을 또한 결정함(17항).

○ 항공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안을 명시하고 있다(18항). 항공기와 선박의 개명 또는 재등록을 포함하여 제재를 회피하거나 결의 조항들을 위반하기 위해 다른 회사로 이전된 북한 항공기 또는 선박과 관련된 어떠한 가용 정보도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고, 위원회가 동 정보를 널리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청함(19항).

○ 더불어 위원회가 적절한 이행에 관한 이행안내서를 발간할 것을 지시함(22항).

- 셋째, 금융 및 자산동결 관련 제재로서 먼저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와 대량현금(bulk cash)을 포함한 어떠한 금융·여타 자산 또는 재원의 제공을 방지할 것을 결정하며, 여기에는 회원국 권한과 법령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 및 활동과 연관된 자국의 영토 내 있거나, 장래 자국의 영토 내로 들어오거나, 자국 관할권 내에 있거나, 장래 관할권 내로 들어오는 어떠한 금융·여타 자산 또는 재원들도 동결하고, 모든 유사한 거래들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모니터링을 적용하는 것이 포함됨(11항).

○ 또한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 금융 서비스의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 은행들이 자국 영토에 신규 지점, 자회사 또는 대표 사무소를 개소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 은행들이 자국 관할권 내 은행과 신규 합작투자를 설립하거나, 자국 관할권 내 은행의 지분을 매수하거나, 자국 관할권 내 은행과 환거래 관계를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또한 촉구함(12항).

○ 다음으로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 자국 영토 또는

자국 관할권 내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북한 내 대표 사무소나 자회사, 또는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13항).

○ 마지막으로 북한과의 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이러한 무역과 연관된 자국 국민 또는 단체에 대한 수출신용, 보증 또는 보험 제공을 포함)을 제공하지 말 것을 결정함(15항).

- 넷째, 기타 제재로서 부속서 I과 II의 개인과 단체,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됨을 또한 결정함(8항).

○ 금번 결의는 각 조항들의 위반을 지원하는 개인에게도 적용 되는데, 동 개인을 적용 가능한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북한 으로의 송환을 목적으로 자국 영토에서 추방할 것을 결정함 (10항).

○ 국가들은 북한 외교 사절단원이 북한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하지 않도록 이들 개인들에 대해 강화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 받음(24항).

- 제재의 이행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연례적으로 제재 품목들을 검토하고 갱신할 것을 지시하고 있으며, 만일 위원회가 그때까지 정보를 갱신하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보리가 30일의 추가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도록 결정함(21항).

- 모든 국가들이 금번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번 결의의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들에 대해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촉구하고, 결의안 1874호(2009)에 의하여 설치된 전문가 패널이 다른 유엔 제재 감시 그룹들과 협력하여 국가들이 이러한 보고서를 적시에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함(25항).
 -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패널의 임무를 검토하고, 임무의 추가 연장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의도를 표명하고, 이를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최대 8명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며, 위원회가 패널과의 협의를 통해 패널의 보고 일정을 조정할 것을 요청함(29항).
- 유엔은 20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3월 3일 안보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함.
- 안보리 결의안 2270호는 1) 북한의 유엔 결의들에 대한 위반을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1항)하고, 2)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감행하지 말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2항), 3)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3항), 4) 여타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4항)을 요구하고 있음.

- 한편 결의안은 북한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북한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추가 핵실험 또는 발사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함(51항).
- 결의안의 내용은 첫째, 금수조치로서 소형무기(small arms and light weapons)와 관련 물품을 포함하는 모든 무기와 관련 물품 및 이들의 제공, 생산, 유지 또는 사용에 관련된 금융거래,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또는 지원에도 적용됨을 결정하고 있음(6항).
 - 소유권이나 통제권 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수리, 점검, 정비, 시험, 역설계, 판매홍보를 위한 북한 행발 품목의 운송에 적용됨을 확인 하며, 이와 관련한 목적으로 여행하는 어떠한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함(underscore)(7항).
 - 또한 식료품과 의약품을 제외하고, 국가가 북한의 군사 작전능력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하는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나, 북한 밖의 다른 회원국의 군사 작전능력 발전을 지원 하거나 강화하는 수출에 대해 적용됨을 결정함(8항).
 -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또는 지원을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을 상기하고, 더불어 본 조항은 국가들이 군사, 준군사 또는 경찰 관련 훈련을 목적으로 교관, 자문관 또는 여타 공무원을 초청하는 것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9항).
 - 한편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금, 티타늄광, 바나듐 광 및 희토류를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되며,

모든 국가들은 북한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하여,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북한으로부터 해당 물질을 조달하는 것을 방지할 것을 결정함(30항).

-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항공기용 가솔린, 나프타 식 제트연료, 케로신식 제트연료, 케로신식 로켓연료를 포함하는 항공유를, 자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 영토로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것을 방지할 것을 결정하나(31항), 다만 민생 목적으로 WMD와 무관한 경우, 외국산 석탄의 나진항을 통한 수출은 WMD와 무관하고,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제재위 사전 허가시, 북한 민항기의 해외 급유도 가능하며 금수 대상 사치품 예시품목은 기존 7개에서 12개로 확대되었음(39항, 부속서 IV).

- 둘째, 화물검색과 관련하여 공항, 항구, 자유무역지대를 포함하여 자국 영토 내에 있거나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화물로서, 북한행발 화물, 또는 북한이나 북한 국민, 또는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들이나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가 중개하였거나 이전을 촉진한 화물, 또는 북한 국적 항공기나 선박을 통해 운송되고 있는 화물을 검색할 것을 결정함(18항).

- 또한 회원국들은 자국 국민과 자국 영토 내에 있는 개인들이 북한에 대해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임대하거나 전세를 주는 것, 또는 승무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할 뿐 아니라 (19항), 자국 국민, 자국 관할권 내에 있는 개인과 자국 영토 내에 설립되었거나 자국 관할권 내에 있는 단체가 북한에서 선박을 등록하는 것, 선박에 북한 국기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취득하는

것, 그리고 북한 국적의 어떠한 선박에 대해서도 소유, 임대, 운영, 선급·인증서 또는 부가서비스 제공 또는 보험 보장을 금지할 것을 결정함(20항).

- 모든 국가들이 어떠한 항공기가 결의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 동 항공기의 자국 영토 내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불허할 것을 결정하고(21항), 마찬가지로 선박에 대해서도 자국 항구로의 입항을 금지할 것을 결정함(22항).

- 원양해운관리회사(OMM)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음을 상기하고, 본 결의 부속서 III에 기술된 선박들이 OMM에 의해 통제되거나 운영되는 경제 자원이며, 따라서 결의 1718호(2006) 8항(d)호에 의해 부과된 자산동결 대상에 해당됨(23항).

□ 셋째, 금융 및 자산동결 제재와 관련해서 결의 1718호(2006) 8항(d)호에 의해 부과된 자산동결이 북한 정부 또는 조선노동당의 기구(entities) 또는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과 단체, 또는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통제되며, 국가들이 북한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에 의해 금지된 여타 활동과 연계되었다고 판단하는 북한 밖의 모든 자금, 여타 금융자산 및 경제 자원에도 적용됨을 결정하고(decide),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자국 국민 또는 자국 영토 내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하여 위에서 금지된 개인과 단체, 그리고 그들을 대신하거나 그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과 단체 또는 그들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단체에 대해 또는 이들을 위해 그 어떤 자금, 금융자산 및 경제 자원도 제공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아울러 결정함(32항).

- 국가들이 자국 영토 내에 북한 은행의 신규 지점, 자회사 또는 대표 사무소의 개설 또는 운영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들이 자국 영토 내 또는 자국 관할권 내 금융기관들이 북한 은행들과 신규 합작투자를 설립하거나 은행의 지분을 매입하거나 환거래 관계를 설립 또는 유지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며, 국가들이 그러한 은행 지점, 자회사 또는 대표 사무소를 폐쇄하고, 또한 북한 은행과의 합작투자, 지분매입, 환거래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본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할 것을 결정함(33항).

- 국가들이 해당 금융 활동들이 북한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에 의해 금지된 여타 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신뢰할만한 정보가 있는 경우, 북한에 존재하는 대표 사무소, 자회사 또는 은행계좌를 폐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90일 이내에 취하기로 결정함(34항).

- 모든 국가들이 자국 영토 내 또는 자국 관할권 내 개인 또는 단체들이 북한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에 의해 금지된 여타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북한과의 무역을 위해 공적 및 사적 금융 지원(이러한 무역에 관련된 자국 국민 또는 단체에 대한 수출신용, 보증 또는 보험 제공을 포함)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함(36항).

- 북한으로 이전되는 금이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국가들이 그러한 금의 이전이 북한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에 의해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도록, 금 운반자(gold couriers)를 통한 이전을 포함하여, 북한으로부터 또는 북한으로의 모든 금의 이전에 대해 결의 2094호(2013) 11항에 명시된 조치들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37항).
-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국가들에 대해 북한의 불법적 금융 활동으로부터 자국의 관할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주의 및 효과적 대응책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 점을 상기하면서 회원국들이 지침문서들을 적용하여 확산 관련 선별적 금융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함(38항).
- 더불어 자산동결 대상이 되는 경제자산에 선박 등 유·무형 모든 자산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12항).
- 다음으로 개인과 단체 등 제재 대상의 지정과 제재 확산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제재가 포함되었음.
 - 제재대상에 국가우주개발국, 원자력공업성, 기계공업부, 경찰총국, 39호실 등 단체 12개 및 개인 16명 추가 하였으며(10, 11항, 부속서 I, II), 제재 회피나 위반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정부대표 추방이 포함되었음.
- 회원국이 북한 외교관, 정부대표 또는 정부 자격으로 행동하는 여타 북한 국민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제재의

회피를 지원하거나 결의의 조항들을 위반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북한으로의 송환을 목적으로 동 개인을 자국 영토에서 추방할 것을 결정함(13항).

○ 회원국이 자국민이 아닌 개인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거나, 또는 제재의 회피를 지원하거나 결의의 조항들을 위반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동 개인의 국적국으로의 송환을 목적으로 동 개인을 자국 영토에서 추방할 것을 결정함(14항).

○ 모든 회원국들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단체의 대표사무소를 폐쇄해야하고, 동 단체 및 직·간접적으로 이들의 이익을 위하거나 이들을 대신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합작 투자 또는 여타 사업 관계에 참여를 금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동 사무소의 대표가 북한 국민인 경우, 국가들은 적용 가능한 국내법 및 국제법, 결의안 2094호(2013) 10항에 따라 북한으로의 송환을 목적으로 동 개인을 자국 영토에서 추방해야 함을 강조함(15항).

○ 북한이 관련 안보리 결의에서 부과된 조치를 위반할 목적으로 위장 회사, 유명 회사, 합작 투자 및 복잡하고 불투명한 소유 구조를 빈번히 사용하는 것을 주목하고, 이런 점에서 위원회가 패널의 지원을 받아 그러한 관행에 관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파악하고, 적절한 경우 이들을 결의에서 부과된 조치의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지시함(16항).

- 제재의 이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가명 및 위장 회사를 포함, 위원회의 개인 및 단체 목록에 포함된 정보를 갱신할 것을 위원회에 지시하며, 본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45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 12개월마다 작업을 완료할 것을 위원회에 지시함 (45항).
- 결의안에 따른 유엔의 대북제재의 특징은 먼저 금수대상의 확대를 들 수 있는데, 초기 WMD 품목 등 일부 품목에 제한되었었으나, 최근 제재는 모든 무기 관련 품목에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광물까지 포함하고 있음.
- 금수대상인 사치품의 품목도 구체화되었으며, 그 수도 확대됨.
- 둘째, 화물검색도 초기 의심 화물에 대한 검색을 제안한 수준에서 의무적으로 화물검색을 실시하는 것으로 관련 조항이 강화됨을 알 수 있음.
- 다음으로 금융제재의 경우, 초기에는 WMD 관련 지정 개인과 단체가 그 대상이었다면, 최근 제재는 관련 행위를 하거나, 관련 행위를 중계하는 주체에 대해서 혹은 그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금융제재를 언급하고 있음.
- 기타 관련 행위와 유관하거나 유관될 가능성이 높은 개인과 단체에 대한 여행제한, 금융거래 제한 등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추방까지도 제재 항목에 포함되어있어 제재안이 매우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음.
- 제재이행 관리의 측면에서도 제재안은 매우 구체화되었음.

- 예를 들어 안보리 1718호에서 북한 제재위원회를 설치하는 수준의 제재이행 관리에서 1874호에서는 전문가그룹의 설치를 제안하였으며, 최근 제재안에서는 제재 대상의 주기적인 정보 갱신 및 제재위반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었음.

2. 개별국의 대북 경제제재

1) 미국⁵⁷⁾

-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유엔 차원에서의 대북한 제재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참여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해왔음.
 - 압박 수단으로는 무역, 금융, 자산동결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어 왔음.
- 북한은 1950년부터 적성국교역법에 따라 미국 내 자산동결 및 무기거래가 금지된 상태임.
 - 또한 미국은 1961년 제정된 대외원조법에 따라 북한 및 북한과 살상용 군사 장비를 주고받은 국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도 보류하도록 하는 제재를 부과하여왔음.
 - 애국법에 따라 북한에 대한 무역 및 금융에 대한 경제제재를 추가적으로 부과한 상태임.

57) 박지연, “경제제재 대상국의 의사결정 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pp. 87-97 내용의 일부를 바탕으로 재구성.

□ 한편 북핵 이슈와 관련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를 시기별로 살펴 보면, 첫째 미국은 1990년대 초반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이하 NPT) 탈퇴와 관련하여 경제관계 중단에 대한 위협을 골자로 하는 대북 경제제재를 발표하였음.

- 당시 미국은 북한의 경제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연료와 식량을 공급하는 중국과 조총련을 통해 수백만 달러를 송금하는 일본의 협력 없이는 제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즉각적인 제재 부과보다는 제재 발의에 대한 위협을 활용하였음.

□ 먼저 미국은 북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이하 IAEA)의 안전조치 이행을 촉구했음.

- 다음으로 중국에 대한 협조를 유도하면서 한국과의 협조 속에 세부단계로 나뉜 경제제재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었음.

○ 미사일 수출 차단이 그 첫 번째 조치였음.⁵⁸⁾

□ NPT 탈퇴 효력이 발생되기 10일 전인 1993년 6월 2일, 미국과의 협상에서 북한 대표 강석주는 NPT 복귀는 불가능함을 주장했음.

□ 이에 미국은 북한에게 유엔 안보리 회부를 통한 경제제재를 언급 하였는데, 미국, 한국, 일본 등은 북한의 NPT 탈퇴가 실제 이루어 진다면, 경제제재 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상태 였음.⁵⁹⁾

58) 이용준. 『게임의 종말』. 한울. 2010. p. 71.

59) 『Washington Post』. 1994. 6. 2; Wit, Joel, Daniel Poneman and Robert Gallucci. 김태현 역. 『북핵위기의 전말』. 모음북스. 2004. p. 69.

- 미국은 중국에게도 “북한이 NPT에서 탈퇴하면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통보했음.⁶⁰⁾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활동에 미국은 북한과의 모든 대화를 취소하고 대북 경제제재에 착수하였음.
- 1994년 6월 3일, 갈루치(Robert Gallucci) 차관보는 한미일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발표하였음.⁶¹⁾
 - 이는 개발원조 공여의 중단, 체육, 문화, 과학 등에서의 교류 및 지원 금지, 무기수출 금지 등을 포함한 경제제재였음.
 - 만약 이러한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IAEA의 특별사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역과 금융거래를 중단한다는 강경조치였음.
- 둘째, 2002년 10월 켈리특사는 북한 방문에서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ighly Enriched Uranium: 이하 HEU) 개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음.
- 이에 북한의 김계관 부상은 핵무기 비밀개발 계획설을 부인했으나 다음날 미국은 “북한의 강석주 제1부상이 전날 김계관 부상의 부인을 번복하고 HEU 개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발표하였으며, 그 결과 미국 국무부는 10월 16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HEU 개발 계획의 시인을 공표함으로써 2차 북핵 위기는 시작되었음.⁶²⁾

60) Wit, Joel, Daniel Poneman and Robert Gallucci, 김태현 역, 『북핵위기의 전말』, 모음북스, 2004, p. 69.
 61) Hufbauer et al,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 Case Histories and Data No. 93-1; Daniel Drezner, *The Sanctions Paradox*,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 280-282.
 62) U.S. Department of State Press Statement (2002, 10, 16.), U.S Department of State Achieve, <http://2001-2009.state.gov/r/pa/prs/ps/2002/14432.htm> (검색일: 2011, 12, 10).

□ 북한의 HEU 개발 시인에 대해 미국은 즉각적으로 경제제재를 발의하였음.

- 부시 행정부는 2002년 11월, 중유제공을 12월부터 중단할 예정임을 발표했으며, 중유지원은 12월부터 실제로 중단되기 시작하였음.

○ 당시 시세로 중유 50만 톤은 1억 달러에 달하는 가치였는데, 이는 2002년 북한의 연간 외화수입의 약 10%에 달하는 액수였음.⁶³⁾

- 미국의 경제제재는 북한이 HEU 개발 계획을 포함한 모든 핵개발 계획의 완전하고 항구적인 폐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었음.⁶⁴⁾

□ 이에 북한은 12월 12일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 제네바 기본 합의문에 따라 연간 50만 톤 중유 공급을 전제로 했던 핵동결 조치를 해제하고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시설들의 가동과 건설을 즉시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음.

- 북한은 12월 12일 핵동결 해제, 22일 5MWe 원자로 봉인 감시 카메라 제거, 12월 31일 IAEA 사찰관 추방, 2003년 1월 NPT 탈퇴성명 등으로 미국의 경제제재에 강경하게 대응했음.⁶⁵⁾

63) 이우탁, 『오바마와 김정일의 생존게임』, 서울: 창해, 2009, p. 215.

64) James Kelly, "United States to North Korea: We Now Have a Pre-Condition," Yale Global Online, Dec. 12, 2002, <http://yaleglobal.yale.edu/content/united-states-north-korea-we-now-have-pre-condition,chadwyck.com/home.do> (검색일: 2012, 8, 29).

65)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Engaging North Korea: the Efficacy of Sanctions and Inducements," in Etel Solingen ed, *Sanctions, Statecraft, and Nuclear Prolifer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 232.

- 미국은 북한의 핵활동을 억지하기 위해 2004년 11월 26일 KEDO 경수로 사업의 1년 중단이라는 경제제재를 추가로 발의했으며, 이후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핵보유를 선언했음.
- 이에 대해 미국은 2005년 5월 행정명령 13382호에 의거하여 WMD 확산연류 북한 회사 12개 및 개인 1명에 대한 자산 동결을 발의했음.
- 셋째, 미국 재무부는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해 자국 내 금융기관들에게 BDA와 일체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융 제재를 2005년 9월 15일 발의하였음.
 - 미국 재무부의 발표로 BDA의 신용은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마카오의 금융질서는 무너졌고, 결국 마카오 행정청은 BDA의 북한계좌를 동결시켰음.
 - 이러한 조치 이후 2006년 상반기에만 전 세계 30개가량의 금융기관이 북한과 금융거래를 축소 혹은 단절시켰음.
 - 또한 미국은 2006년 4월, '외국자산 통제규정' 개정을 통해 미국인의 북한선적 선박의 소유, 임차, 운영, 보험제공을 금지하는 제재를 발의했음.
 - 그해 7월에는 미국 상원에서 '북한 비확산법'이 가결되어 WMD 전용물자, 기술을 거래하는 개인, 기업들의 대미거래가 금지되었음.
 - 이어 9월 21일 조선광성무역 등 북한의 8개 기업이 대량살상 무기 확산을 지원한 혐의가 있다며 이들 기업이 미국 내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보유할 모든 자산에 대해 동결령을 내렸음.

○ 대상은 조선광성무역, 해성무역, 조선종합설비수입, 조선국제 화학 합작, 조선부강 무역, 조선영광 무역, 조선연화기계 합작, 토성기술무역 등이었음.⁶⁶⁾

□ 넷째, 2006년 이후 미국은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에 강력히 동참 하면서 복수의 행정명령으로 추가적인 제재를 부과하였음.

□ 먼저 미국은 2008년 북한에 대한 적성국교역법에 의한 제재를 해제하면서 일부 경제제재의 유지를 목적으로 행정명령 13466호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였음.

- 행정명령의 내용은 미국에 동결된 북한 관련 자산의 동결의 유지와 북한 국적 선박의 소유와 보유 및 운영 금지 등임.⁶⁷⁾

□ 다음으로 2010년 미국은 천안함 사건 이후 행정명령 13511호를 통해 대북한 경제제재를 부과하였음.

- 구체적인 내용은 WMD 확산 외 무기수출입, 사치품 거래, 마약 밀매, 화폐위조 등의 불법행위 종사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제재와 북한 정찰총국 노동당 39호실, 청공연합 등 금융제재 대상의 지정 등을 담고 있음.⁶⁸⁾

66) Dianne Rennack, *North Korea: Economic Sanctions*,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2006, pp. 22-28.

67) Executive Order 13466, <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Documents/nkeo.pdf> (검색일: 2016. 4. 15).

68) Executive Order 13551, <https://fas.org/irp/offdocs/eo/eo-13551.pdf> (검색일: 2016. 4. 15).

- 북한에 대한 세 번째 행정명령은 13570호이며 2011년 발표되었음.
 - 행정명령 13570호에서는 북한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과 서비스 기술에 대해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다루고 있음.
- 다음으로 2015년 행정명령 13687호는 북한의 소니 픽처스 해킹에 대한 대북제재임.
 - 주요 내용으로는 북한 정부와 당 관리, 산하단체기관을 포괄적 제재 대상으로 지정, 사이버 공격 위협 행위와 인권 관련 불법행위도 제재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근거 마련 및 개인 10명과 단체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것을 들 수 있음.⁶⁹⁾
- 마지막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하여 지난 3월 미국은 새로운 행정명령 13722호를 발표하였음.
 - 해당 행정명령에는 북한 국외노동자 송출 책임자 및 관여자에 대한 제재, 북한 수송 광물, 에너지, 금융관련 자산 제재, 미국 관할권 내 개인과 단체에 제재 적용, 개인 2명, 단체 15곳, 선박 20척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음.⁷⁰⁾

2) 한국

- 한국의 대북제재는 한국이 유엔에 제출한 제재이행보고서를 통해 분석할 수 있음.

69) Executive Order 13687,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5/01/02/executive-order-imposing-additional-sanctions-respect-north-korea> (검색일: 2016. 4. 15).

70) Executive Order 13722, 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Programs/Documents/nk_eo_20160316.pdf (검색일: 2016. 4. 15).

- 한국의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⁷¹⁾, 한국은 결의안 1718호 상의 제재대상 품목 이전 및 조달 규제, 제재대상 개인 및 단체의 금융자산 동결과 이전 방지, 제재대상자의 출입국 규제, 북한행·발 화물검색 등 핵심 제재 안 중 다음의 항목을 이행하였음.
- 먼저, 무역제재로서 재래식무기, WMD 관련물자 및 사치품 관련 「대북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하였음.
 - 둘째, 기존 금융재원 이전 통제 고시와 통합한 신규 고시를 제정하였음.
 - 셋째 출입국 및 경유 규제와 관련하여 제재대상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와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방문증명서 발급 및 출입경 심사 과정에서의 규제를 실시하였음.
 - 다음으로 화물 검색과 관련하여 육상 화물은 관련 규정에 따른 통관심사 및 운송화물 검색을 강화하고, 화물자동차 X-ray 투시기 등 장비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해상 화물은 남북 해운합의서와 국내법에 따라 검사하도록 조치하였음.
 - 유엔 제재의 후속조치로서 철도·도로 개보수와 관련한 자재 장비의 인도 중단을 계속 유지하였으며, 경공업 원자재 제공, 지하자원 공동개발, 한강하구 개발사업의 중단 등을 결정하였음.
 - 더불어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즉 당국차원의 쌀 비료 지원 유보 조치를 유지하였음.

71) Implementation Report (UNSCR 1718),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S/AC.49/2006/8;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S/AC.49/2006/8/Add.1 (검색일: 2016. 4. 15).

- 또한 민간의 교류협력에 대한 정부지원 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남북경협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에 따라 추진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강화하였으며, 사회문화분야 사업도 선별 지원하는 방법을 도입하였음.
 - 특히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업 관련 조치로서 금강산관광 체험 학습 정부 지원 중단, 개성공단 1단계 2차 분양 유보조치 계속 유지 등이 있음.
- 다음으로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대한 이행보고서에 따르면⁷²⁾, 한국은 유엔제재의 각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행 및 추가 조치를 결정하였음.
- 첫째, 무기 등의 구매 및 판매 금지와 관련하여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정, 제3국 경유 북한 이전 방지를 위한 수출 허가 심사 기준 적용 강화, 13종의 품목을 사치품으로 지정, 대북 반출 제한 조치 시행 하였음.
 - 다음으로 화물 검색과 관련하여서는 대북 반출·입 화물 검사 강화하였음.
 - 셋째, 금융제재에 대해 당시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따른 제재 대상 지정 기업들과 거래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은 없으며, 대한민국 내 북한 소유 자산이나 계좌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국제평화

72) Implementation Report (UNSCR 1874),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S/AC.49/2009/2;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S/AC.49/2009/13;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S/AC.49/2009/13/Add.1 (검색일: 2016. 4. 15).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 개정 등을 통해 향후 제재대상 북한 기업과 거래 금지 조치 및 감시 강화를 추진하였음.

□ 셋째, 안보리 결의 2094호에 대한 한국의 국가이행 보고서에 따르면⁷³⁾,

- 첫째, 무기 및 관련물자 금수 조치와 관련하여 한국은 「남북교류협력법」, 「대외무역법」 등에 따라 금수 관련 대북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등 지원 금지하였으며, 「5·24 조치」에 따라 결의 부속서에 명시된 핵·미사일·화학무기 관련 8개 품목 통제하였고, 「대외무역법」 및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캐치올(Catch-all) 통제를 실시하였음.
- 또한 안보리 결의 2094호 제시된 사치품(보석류, 자동차, 요트 등)에 대해 2009년 7월부터 지정한 사치품 목록에 포함하였음.
- 둘째, 검색 및 차단과 관련하여 한국은 「남북해운합의서」, 「해양경비법」, 「관세법」 등에 따라 한국 영토 내 북한 행·발 금수품목 적재의심 화물에 대해 검색 실시하였으며, 「개항질서법」에 따라 공해상 검색에 응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한국 항구 입항을 불허하도록 하였음.
- 또한 「남북교류협력법」 및 「항공법」에 따라 금지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의 한국 영토 내 이·착륙 및 영공통과를 불허하였음.
- 셋째, 금융제재와 관련하여 한국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음.

73) Implementation Report (UNSCR 2094),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S/AC.49/2013/8 (검색일: 2016. 4. 15).

- 또한 안보리 결의 2094호에 따라 추가 지정된 2개 단체 및 3명의 개인에 대해 금융 제재 조치 시행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금지활동 등에 기여 가능한 금융 및 현금 서비스 제공, 북한 은행 신규지점 개설 및 합작투자, 대북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등을 금지하였음.

- 마지막으로 안보리 결의상 제재대상자와 그와 연관된 인물에 대한 한국 방문을 불허하였음.

□ 넷째, 한국은 지난 3월 발표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계획임을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음.

- 더불어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인 2월부터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였으며, 기타 남북경협 및 교류협력 등을 중단하였음.

- 2016년 3월에는 독자제재로서 금융제재와 해운제재를 부과하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북한의 WMD 개발에 관련한 단체 30개(북한 단체 24개 및 제3국 단체 6개)와 개인 40명(북한인 38명, 제3국 출신 2명)에 대한 금융제재를 발표하였음.

○ 제재 대상 단체나 개인과 금융거래시 3년 이하의 징역 및 3억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음.

○ 여기에는 대남도발의 배후로 지목되어온 김영철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가 포함되어있으며, 대상 단체 중 13개 단체는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임.

- 다음으로 해운제재의 경우 한국은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이내에

국내 입항을 전면 불허하고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이 소유한 편의치적 선박의 국내 입항 또한 금지하였음.

- 또한 수출입 통제와 관련하여 북한산 물품이 제 3국을 우회하여 국내에 위장반입되지 않도록 현장 차단 활동 및 남북 간 물품 반출입에 대한 통제 강화 특히 대량살상무기 개발 특성을 감안하여 실효적 수출통제기준을 마련하고 특화된 감시 대상 품목을 작성할 계획임.
- 한편 한국 국민과 재외동포에게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등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영리시설에 대한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음.

□ 기타 독자제재로서 2010년 5.24조치가 있음.

-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 한국은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 남북교역 중단,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부과한 바 있음.
- 한국 정부는 대북제재를 부과하면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요구해왔음.

□ 2015년 6월에는 북한과 무기거래 혐의가 있는 제3국적자 대상 금융제재를 부과하였음.

- 한국은 유엔 안보리가 지정한 제재 대상자 이외 무기거래 등을 통해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한국 국민, 또는 기업이 해당 제재 대상자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및 영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급, 영수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 한국의 대북제재는 기본적으로 무역, 금융, 자산동결 등 다양한 제재 도구들을 복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과거 결의안 이행을 위한 수동적 조치였다면 최근 결의안 보다 강력한 추가 제재를 포함하는 적극적인 형태로 변모하였음.
- 특히 제재항목들 중 금융제재 항목들을 살펴보면, 초기 결의 1718호의 이행 조치로서의 금융제재는 금융재원 이전에 대한 신규 고시를 마련하는 형태의 매우 낮은 단계였음.
 - 결의 1874호와 관련해서도 유사하게 결의에서 지정한 금융제재 대상 감시 강화 지침을 개정하는 수준의 제재가 부과되었음.
 - 안보리 결의 2094호의 이행조치는 기존 조치와 더불어 자금세탁 방지기구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내부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유엔이 지정한 구체적인 대상 및 항목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하였음.
 - 특히 최근 한국의 대북 금융제재는 유엔의 대상과는 별도로 금융제재 대상을 지정하고 있으며, 규정상 징역형 및 벌금형을 명시하고 있는 특징을 가짐.

IV

대북 경제제재의 이행 평가

1. 최근 이행보고서 분석

-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2016년 9월 기준, 총 4건의 결의안을 통해 부과되었으며, 회원국들은 각 결의안에 대한 이행여부를 이행 보고서 제출의 형식으로 보고하도록 요구받았음.
- 과거 첫 번째 결의안인 결의안 1718호 발의 이후에는 총 76개 회원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EU도 국별 보고와는 별도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 결의안 1874호 이행은 58개 회원국들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 이행 여부를 보고하였음.
- 다음으로 결의안 2094호에 대한 제재이행은 총 29개국이 보고서 제출을 통해 제재 이행 현황을 공개하였음.
- 기타 26개국은 각 결의안에 대한 이행보고서가 아닌 자국의 역량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3번의 결의안에 대하여 모두 이행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킨 경우는 24개국에 불과했음.
- 지난 3월 발표된 결의안 2270호에 따른 대북제재에 대하여 회원국들은 90일 이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고되었음.
- 한편 2016년 8월 21일 기준으로 44개 유엔 회원국의 대북 결의안에 대한 이행보고서가 공개됨.
 - 권고대로 6월 2일까지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18개에 불과함.
 -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아주 초기 단계의 제재 이행을 보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관련 부처에 해당 사항을 통보하였으며,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라는 수준임.
 - 다만,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재 조치 방법과 독자제재 추진 현황을 보고하였음.
- 주요 관련 국가들의 이행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 미국의 경우 지난 4회의 결의안에 대하여 모두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결의안 2270호에 대한 보고서는 19쪽 분량으로 보고서 제출 회원국 중 가장 분량이 많음.
 - 이행 동향도 매우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보고되어있음.
 - 첫째, 무기수출입 통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기관의 이행 준수 여부 및 행정명령을 통한 추가 제재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음.

- 둘째, 선박 및 항공 관련 규제도 통제 전담 기관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되나, 다만 모든 규정에 있어서 인도주의적 목적의 행위에 대한 예외규정도 함께 소개하고 있음.
- 셋째, 결의안 2270호에 실명이 거론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행정 명령 등이 근거로 제시되고 있음.
- 기타로 자국민이 어떠한 목적에서건 북한과 관계를 가지고자 할 경우 관련 기관에 승인을 받아야함을 명시하고 있음.
- 그 외 결의안 제재 항목의 거의 대부분에 대한 조치 사항이 명시되어있음.

□ 일본과 한국의 경우는 15쪽 내외의 매우 구체적인 제재 이행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먼저 일본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금융제재, 개인 이동의 제한, 기술이전의 제한, 선박과 항공의 이동 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방법을 소개하고 있음.
- 더불어 특정 개인에 대한 이동 제한, 외교관의 방문 제한,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이동 제한, 금융거래 제한 등 독자제재 부과도 명시하고 있음.
- 구체적인 항목과 제한 방법 등을 부록을 통해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제재 이행을 추진하고 있는 수준의 보고서로 평가됨.

- 한국의 경우도 일본과 유사하게 유엔 제재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서술하고 있으며, 실제 제재 이행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 더불어 한국은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다양한 독자제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중국은 지난 4회의 결의안에 대하여 모두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이번 결의안에 관한 보고서는 총 5쪽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표명하고 있음.
 - 경제제재 내용과 관련해서는 특이사항 없이 결의안에 대한 이행을 언급(무기 수출입 금지, 수출통제규정 이행, 자산동결 조치 이행, 선박규제 이행 등)했으며, 다만 예외사항을 반영하여 광물 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음.
- 한편 러시아는 지난 4회의 결의안에 대하여 모두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이번 결의안 2270호에 대해서는 유관 부처에 관련 정보를 전달 하였으며,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북한은행들과의 협력에 있어 유의 해야 할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고 밝히고 있음.
- 그 외 국가들의 이행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호주, 캐나다, 이집트 등은 1쪽 이하의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호주의 경우 기존 제재 이행과 연계되어 추가적인 제재가

자동 발효되었으며, 2016년 7월 총선 이후 새로운 제재를 추가할 예정임을 보고하고 있음.⁷⁴⁾

○ 캐나다의 경우도 기존 제재이행과 함께 추가적인 이행이 추진될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곧(soon) 확정할 것이라 보고하고 있음.⁷⁵⁾

○ 이집트는 해당 부처(ministries)에 제재와 관련한 조치를 알렸다고 서술하는 수준의 보고서를 제출하였음.⁷⁶⁾

○ 여타 1쪽 분량의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들은 대부분 제재 이행의 의지를 나타내는 수준으로 실제 제재 이행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 한편 라오스, 산마리노, 터키, 우크라이나 등은 1쪽 이상 분량의 제재보고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먼저 라오스의 경우 관련 부처들에게 통제 개인, 목록 등을 회람하였으며, 최근 북한과의 무역 및 금융거래가 부재(non-exist)함을 보고하였으며, 외교관계에 의한 방문객은 결의안에 따라 유지되는 수준으로 운영하겠다고 명시하였음.

74) The Government of Australia is currently preparing new regulations to give effect to the measures outlines in the remaining paragraphs of the resolution, however, given that th Prime Minister has announced an election for both houses of Parliament on 2 July 2016, the Government is currently subject to the caretaker conventions until the outcome of the election is known. This means that the new regulations will be implemented after the election. (이행보고서 中)

75) The country's full report will be submitted to the Committee as soon as the related implementation steps are finalized. (이행보고서 中)

76) The Government of Arab Republic of Egypt has informed all relevant ministries and State agencies of the provisions contained therein with a view to taking the measures necessary to implement the terms and provisions of the resolution. (이행보고서 中)

- 다음으로 산마리노의 경우, 관련 부처에 제재 리스트를 회람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5월 4일에는 의회에서 제재 이행을 위한 법안이 마련되었음을 보고하였음.
- 터키는 기본적으로 2006년부터 지속해온 대북제재에 대해 지속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외교부를 통해 관련 활동과 연계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있는 등의 활동을 보고하였음.
- 우크라이나 또한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외교부 및 우크라이나 국영은행에 관련 조항을 회람하였으며, 입법을 통해 대북제재를 구체화하기 위한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하였음.
- 해당 국가들은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의지 표명 후 일부 낮은 수준에서 제재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초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2. 기타 이행 평가

- ☐ 유엔에 대북제재와 관련한 제재이행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통해 일반적으로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 정도를 평가할 수 있겠으나, 유관국들의 후속조치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제재 이행의 평가도 가능함.
- ☐ 본 연구에서는 미국, 중국, 한국의 추가적인 제재 발의 조치를 기타 이행 평가의 항목으로 다루고 있음.
 - 먼저 미국의 경우 본 보고서에서도 개별 제재 발의국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임.

- 특히 유엔 결의안 2270호 발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명령 등을 통해 대북제재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있음(III장 참조).
- 물론 제재를 발의하더라도 미국과 같이 대상국인 북한과 경제관계가 없는 국가가 적절한 수준의 제재이행이 가능하기는 어려움.
- 다만, 국제사회에서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미국은 구체적인 이행이 어렵더라도 상징적인 의지의 표현을 지속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유사하게 한국 또한 지난 3월을 전후하여 다양한 종류의 대북제재를 발의해오고 있음(III장 참조).
- 그러나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제재 발의도 상징적인 수준 이상의 이행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앞선 경우와는 달리 중국은 북한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가진 국가로서 제재를 이행하고자 할 경우, 그 파급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국제사회의 이러한 기대에 중국은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의 의지를 여러 채널을 통해 밝힌바 있음.
- 사실 중국은 과거 핵실험 반복 시마다 비난 및 유엔 결의에 찬성하고 단기적으로 압박을 강화, 한편 무상원조와 경제 관계는 별도로 지속해온바 있음.
- 그러나 지난 2월, 전례 없는 수준의 실효적인 유엔제재 조치에 합의하였으며,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사를 밝혔음.

- 4월에는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유엔제재의 후속조치로 대북제재의 금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공문을 발표하는 등 기존보다는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

- 한편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지난 6월 1일 베이징을 방문한 조선노동당 국제부장 리수용과 만난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이번 방문은 중조양당이 전략적 소통의 전통을 체현하고 있는 것이며, 김정은 위원장과 조선노동당 중앙이 양당과 양국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조선 인민들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개선하며, 조선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사업에서 더욱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 유럽연합은 지난 5월 이사회결정을 통해 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하였음.

- 유럽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비핵화와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강력한 독자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유럽연합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대북 수입금지 품목의 확대, 사치품 금수품목 확대, 대북교역 관련 수출신용 전면 금지, 대북송금 및 금융서비스 규제 강화, 북한 소유 및 운영 또는 북한 승무원 탑승 항공기나 선박의 EU 영공 통과, 기착, 기항 금지 등 강력한 조치들이 포함되었다는 측면에서 이행이 본격화될 경우 커다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V

결론

- 최근 국제사회는 무력사용을 통한 문제해결보다는 경제제재를 활용한 갈등해결이 선호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국제사회의 북핵문제에 대한 접근 전략도 마찬가지인데, 북한은 정권수립 직후부터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국이었음.
 - 1950년부터 미국은 북한의 공산정권에 대한 경제제재를 부과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북한의 핵보유 의혹과 관련하여 다수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 북한은 제재 대상국으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
 - 그런데 대부분의 제재는 그 효과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됨.
 - 일반적으로 특정 행위는 효과가 높을 경우 반복되는데, 경제제재의 경우 효과가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강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 최근 유엔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결의안 2270호를 바탕으로 대북제재를 발의하였음.

- 대북제재의 내용은 전례 없이 강력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제재의 효과에 대한 분석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음.
 - 먼저 제재의 경제적 실효성을 따져보면, 제재안의 경우 과거와 비교해 제재 품목, 대상 기업 및 개인의 확대 및 의무화 규정 추가 등으로 강력한 제재안 마련된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의 항목에 예외규정 삽입으로 실효성 기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뿐만 아니라, 제재이행을 전망해보더라도 미국, 일본은 강력한 제재 이행 및 독자제재 발의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중국도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제재이행이 현실화될 것인지 여부 불투명한 상태임.
 - 제재이행이 구체화된다고 할지라도 현실화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독자제재의 경우에도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이행할 가능성 높지 않은데, 이는 중국 등의 변수 때문임.
 - 중국 또한 제재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표명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 얼마나 이행할 것인지 미지수임.
- 더구나 국제사회의 제재이행이 본격화된다고 할지라도 그 효과가 과거보다 높아질 가능성은 있으나,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기본적으로 북한의 무역구조는 매우 폐쇄적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단절에 따른 피해가 여타 국가들과 비교해 낮음.
 - 더구나 인도주의적 목적 및 민간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제재 적용

애매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 경험을 통한 대비책으로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의 가능성이 있음.

- ☐ 결국, 제재 이행이 본격화되더라도 제재의 경제적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임.
- ☐ 그러나 한편으로 긍정적인 것은 경제제재의 효과는 단순히 경제적 실효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실효성과는 무관하게 나타나는 외교적 실효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를 감안하면 제재의 경제적 효과와 무관한 대화국면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분위기는 중국과 미국이라는 거대 행위자의 대외정책 결정과 북한이라는 행위 주체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참고문헌

- 노엄 촘스키 외. 『미국의 아라크 전쟁: 전쟁과 경제제재의 참상』. 북막스. 2002.
- 박지연. “경제제재 대상국의 의사결정 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 박지연. “유엔의 스마트제재 연구.” 『국가전략』. 제 21권. 1호. 2015.
- _____. “국제사회 대북 금융제재의 현황과 시사점.” 『북한의 금융』. 오름. 2016.
- 이우탁. 『오바마와 김정일의 생존게임』. 창해. 2009.
- 임갑수·문덕호. 『유엔 안보리 제재의 국제정치학』. 한울. 2013.
- 이용준. 『게임의 종말』. 파주: 한울. 2010.
- Allen, Susan.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Sanctions Success and Failure.”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31. No. 2. 2005.
- Al-soyel, Dina. “Target Types and the Efficacy of Economic Sanctions.” Rice University Ph. D Dissertation, 1999.
- Baldwin, David. *Economic Statecraf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 Benn Steil and Robert Litan. *Financial Statecraft*. Yale University Press. 2006.
- Bondi, Loretta. “Arms Embargoes: Is Name Only?” in David Cortright and George Lopez, eds. *Smart Sanctions*. Mayland: Rowman & Littlefield, 2002.
- Corney, Richard. “The UN Experience with Travel Sanctions.” in David Cortright and George Lopez, eds. *Smart Sanctions*. Mayland: Rowman & Littlefield, 2002.
- Dianne, Rennack. *North Korea: Economic Sanctions*.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2006.
- Doxey, Margaret. “Reflections on the sanctions decade and beyond.” *International Journal*. Vol. 64. No. 2. 2009.
- Elliott, Kimberly. “Analyzing the effects of targeted sanctions,” in David

- Cortright and George Lopez, eds. *Smart Sanctions*. Mayland: Rowman & Littlefield, 2002.
- Eriksson, Mikael.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United Nations targeted sanctions," in Biersteker et al. eds. *Targeted Sanc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 Galtung, Johan. "On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With Examples from the Cases of Rothesia," *World Politics*, Vol 19. No. 3, 1967.
- Gilpin, Robert. "Economic Independence and National Security in Historical Perspectives," in Knorr, Klaus and Frank Trager eds. *Economic Issues and National Security*. KANSAS: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77.
- Gordon, Joy. "Smart Sanctions Revisited," *Ethnics & International Affairs*, Vol. 25. No. 3, 2011.
- Hufbauer et al.,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 3rd edition*. Washington, DC: Peters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 2007.
- Knorr, Klaus. "International Economic Leverage and its Uses," in Knorr, Klaus and Frank Trager eds. *Economic Issues and National Security*. KANSAS: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77.
- Krustev, Valentin. *Bargaining and Economic Coercion: The Use and Effectiveness of Sanctions*. VDM Verlag, 2008.
- Martin, Lisa. *Coercive Cooperation: Explaining Multilateral Economic Sanc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Mesquita, Bruce Berno et al. *The Logic of Political Survival*. Cambridge, MA: The MIT Press, 2003.
- Mueller and Mueller. "Sanctions of Mass Destruction," *Foreign Affairs*, Vol. 78. No. 3, 1999.
- National Iranian American Council, *Losing Billions*. National Iranian American Council, 2014.

- Portela, Clara. "National implementation of United Nations sanctions." *International Journal*. Vol. 65. No. 1. 2009.
- Reid et al. "Targeted Financial Sanctions," in David Cortright and George Lopez, eds. *Smart Sanctions*.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2002.
-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Engaging North Korea: the Efficacy of Sanctions and Inducements," in Etel Solingen ed. *Sanctions, Statecraft, and Nuclear Prolifer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 Wallenteen, Peter. "Characteristics of Economic Sanction."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5. No. 3. 1968.
- Wintrobe, Ronald "The Tinpot and the Throat of the Na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2. 1990.
-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39. <http://www.un.org/en/sections/un-charter/introductory-note/index.html>
- Charter of the United Nation Article 25. <http://www.un.org/en/sections/un-charter/introductory-note/index.html>
-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U.S. 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 <http://www.cfr.org/foreign-aid/us-foreign-assistance-act-1961/p27046>
- Executive Order 13466, <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Documents/nkeo.pdf>
- Executive Order 13551, <https://fas.org/irp/offdocs/eo/eo-13551.pdf>
- Executive Order 13687,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5/01/02/executive-order-imposing-additional-sanctions-respect-north-korea>
- Executive Order 13722, 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Programs/Documents/nk_eo_20160316.pdf
- Implementation Report (UNSCR 1718), <http://www.un.org/ga/search/>

- view_doc.asp?symbol=S/AC.49/2006/8;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S/AC.49/2006/8/Add.1
- Implementation Report (UNSCR 1874),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S/AC.49/2009/2;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S/AC.49/2009/13;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S/AC.49/2009/13/Add.1](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S/AC.49/2009/2;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S/AC.49/2009/13;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S/AC.49/2009/13/Add.1)
- Implementation Report (UNSCR 2094),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S/AC.49/2013/8
- James Kelly, "United States to North Korea: We Now Have a Pre-Condition," Yale Global Online, Dec. 12, 2002, <http://yaleglobal.yale.edu/content/united-states-north-korea-we-now-have-pre-condition.chadwyck.com/home.do>
- UNSCR 1070, <http://www.securitycouncilreport.org/atf/cf/%7B65BFCF9B-6D27-4E9C-8CD3-CF6E4FF96FF9%7D/Chap%20VII%20SRES%201070.pdf>
- UNSCR 1373, [http://www.un.org/en/sc/ctc/specialmeetings/2012/docs/United%20Nations%20Security%20Council%20Resolution%201373%20\(2001\).pdf](http://www.un.org/en/sc/ctc/specialmeetings/2012/docs/United%20Nations%20Security%20Council%20Resolution%201373%20(2001).pdf)
- UNSCR 1991, <http://www.securitycouncilreport.org/atf/cf/%7B65BFCF9B-6D27-4E9C-8CD3-CF6E4FF96FF9%7D/DRC%20S%20RES%20199.pdf>
- UNSCR 1132, http://www.sipri.org/databases/embargoes/un_ams_embargoes/sierra_leone/1132
- UNSCR 1737, https://www.iaea.org/sites/default/files/unsc_res1737-2006.pdf
- UNSCR 1747, https://www.iaea.org/sites/default/files/unsc_res1747-2007.pdf
- UNSCR 1803, https://www.iaea.org/sites/default/files/unsc_res1803-2008.pdf
- UNSCR 1835, https://www.iaea.org/sites/default/files/unsc_res1835-2008.pdf
- UNSCR 1929, https://www.iaea.org/sites/default/files/unsc_res1929-2010.pdf
- UNSCR 1984,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S/RES/1984\(2011\)](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S/RES/1984(2011))

- UNSCR 2049.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S/RES/2049\(2012\)](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S/RES/2049(2012))
- U.S. Department of State Diplomacy in Action. Iran, North Korea, and Syria Nonproliferation Act Sanctions. <http://www.state.gov/t/isn/inksna/>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Overview of Section 311 of the USA PATRIOT Act. <https://www.treasury.gov/press-center/press-releases/Pages/tg1056.aspx>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TRADING WITH THE ENEMY ACT OF 1917. <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Documents/twea.pdf>
-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https://www.bis.doc.gov/index.php/regulations/export-administration-regulations-ear>
- U.S. Department of State. 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s. <https://www.pmddtc.state.gov/ECR/index.html>
- U.S. Department of State Diplomacy in Action. Office of Missile, Biological, and Chemical Nonproliferation. <http://www.state.gov/t/isn/151025.htm>
- U.S. Department of Energy. Office of Nuclear Energy. <http://energy.gov/ne/office-nuclear-energy>
- U.S. Department of State Diplomacy in Action. Iran Sanctions. <http://www.state.gov/e/eb/tfs/spi/iran/index.htm>
- U.S. Department of State Diplomacy in Action. Iran Sanctions. <http://www.state.gov/e/eb/tfs/spi/iran/index.htm>
- U.S. Department of State Press Statement (2002. 10. 16.). U.S Department of State Achieve. <http://2001-2009.state.gov/r/pa/prs/ps/2002/14432.htm>

붙임 1.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 비공식 번역본

안보리는,

안보리 결의 825호(1993), 결의 1540호(2004), 특히 1695호(2006)와 2006.10.6 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6/41)을 포함한 지난 관련 결의들을 상기하며,

핵,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하며,

2006.10.9. 핵무기 실험을 실시했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장 및 동 실험이 야기하는 NPT 및 전세계적 핵확산금지체제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 역내외의 평화와 안전에 야기하는 위협에 대해서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 핵무기 비확산 체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표명하며, NPT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보유국 지위를 보유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NPT 탈퇴선언 및 핵무기 추구를 개탄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제조건없는 6자회담복귀 거부를 추가적으로 개탄 하며,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및 미국이 2005.9.19 발표한 공동성명을 지지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여타 안보 및 인권 관련 우려에 반응 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장하는 핵실험이 역내외 긴장을 증대시켰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장하는 동 실험이 역내의 긴장을 강화시킨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따라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존재함을 결정하며,

유엔헌장 제 7장하에 행동하며, 41조하에서 조치를 취한다.

1. 특히 1695호(2006)와 동 실험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탄을 야기하며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2006.10.6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6/41) 등 관련 안보리 결의를 극도로 무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실험 선언을 규탄한다.
2. 어떤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발사도 시행하지 않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요구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즉시 NPT 탈퇴발표를 철회하도록 요구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속한 시일내에 NPT 및 IAEA 안전조치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고, NPT 모든 당사국이 동 조약상 의무를 계속 준수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재확립하도록 다시금 요구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IAEA에 의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무기 및 현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하고 NPT 당사국에 적용되는 의무 및 IAEA 안전조치협정(IAEA INFCIRC/403)의 규정 및 조건에 따라 엄격하게 행동해야하며, IAEA에 의해서 요구되고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개인, 문서, 장비, 시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상기요구조건 이상의 투명성 조치를 IAEA에 제공해야 함을 결정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여타 현존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함을 또한 결정한다.

8. 다음을 결정한다.

(a) 자국 영토를 통해서 또는 자국인에 의하거나 혹은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아래 사항을, 그 원산지와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것을 방지한다.

(i) 유엔재래식무기등록제도상 목적으로 정의된 모든 탱크, 장갑전투차량, 대구경 대포, 군용항공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또는 미사일 시스템, 또는 이와 관련된 부속품을 포함한 물자 또는, 안보리 또는 본 결의 12항에 의해 구성되는 위원회(제재위원회, 이하 제재위)에 의해 결정되는 물자

(ii) 본 결의 채택후 14일 이내에 제재위가 S/2006/816의 리스트를 감안하여 그 규정을 수정하거나 완결하지 않는 한 S/2006/814와 S/2006/815에 명시된 모든 품목, 물자, 장비, 상품 및 기술과 안보리 또는 제재위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또는 여타 WMD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여타 품목, 물자, 장비, 상품, 기술

(iii) 사치품

(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8(a)(i) 및 8(a)(ii)상의 모든 품목의 수출을 중지해야 하고 각국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또는 자국인에 의하거나 자국적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동 품목의 조달을 금지해야 한다.

(c) 모든 회원국은 자국인에 의해서 또는 자국 영토를 통해서, 상기 8(a)(i) 및 8(a)(ii)에 포함된 물품의 제공, 제조, 보수, 사용과 관련된 기술 훈련, 지문, 용역 또는 지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이전하거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민 또는 영토로부터 이전받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d) 모든 회원국은 각국의 개별적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제재위원회 또는 안보리에 의해서, 불법적 방법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여타 WMD 그리고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연루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지정된 개인, 단체 또는 이들의 대리인 또는 하수인들이 동 결의 시점 및 그 이후 작간접적으로 보유 또는 통제하는 자국 영토내의 자금, 여타 금융자산 및 경제자원을 즉각 동결하고, 자국인 또는 자국 영토내 개인이나 단체가 상기 개인이나 단체들이 자금, 금융자산 또는 경제 자원을 사용하게끔 하거나 동 자원들이 이들에 이득이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e) 모든 회원국은, 동 조항이 자국인의 자국 입국을 거부하게 하지 않는 한, 제재위 또는 안보리에 의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탄도미사일 및 여타 WMD 관련 프로그램과 관련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책을 지원 또는 촉진시키는 등 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정된 개인 및 그 가족의 자국 영토 입국이나 경유 방지를 위한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

(f) 8항의 요구조건의 이행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이를 통해 핵, 화학, 생물무기 및 그 운반수단과 관련 물자의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해, 모든 회원국은 자국 법령에 따라, 그리고 국제법에 부합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행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발 화물 검사 등 협력조치를 필요에 따라 취할 것을 요청한다.

9. 위 8(d)항의 규정은 관련국들이 하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금융 또는 여타 자산 또는 자원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결정한다.

(a) 식량, 임차료 또는 모기지(mortgage), 의약품과 치료, 세금, 보험, 공공 요금을 포함한 기본 지출 또는 전문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불된 적정수준의 비용, 법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변제, 동결자산·여타 금융자산 및 경제적 자원의 보유·유지를 위해 각국 국내법에 따라 부과 되는 요금 및 서비스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관련국들이 동 자금, 여타 금융자산 및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하고자 하는 의사를 제재위에 통보하고, 동 통보 후 5일내(근무일 기준) 반대결정이 부재한 경우

(b) 특수 비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그러한 결정이 관련국들에 의해서 제재위에 통보되고 안보리에 의해 승인된 경우

- (c) 법적, 행정적 및 중재적 선회특권 또는 판결 대상으로서, 이러한 경우에 자금, 여타 금융자산, 경제자원이 선회특권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사용될 여지가 있는 경우; 단, 이 결의의 효력 발생 전에 성립된 사안으로서 8(d)항에 언급된 사람 및 안보리 또는 제재위 의해 확인된 개인이나 단체에게 이득을 주지 않고, 관련국에 의해서 제재위에 통보된 사항이어야 함.
- 10. 상기 8(e)에서 부과된 조치는 제재위가 동 여행이 종교적 의무를 포함한 인도적 사유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사안별로 결정하거나, 제재위가 예외의 불인정은 동 결의의 목적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11. 모든 회원국이 동 결의 채택 후 30일 이내에 각국이 8항을 효과적으로 이행 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들에 관해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요청한다.
- 12. 안보리 의사규칙 28조에 따라 안보리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래 임무를 수행하는 안보리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한다.
 - (a) 각국 특히 8(a)에 언급된 품목, 물자, 장비, 상품 및 기술 생산국 또는 보유국들로부터 8항에서 부과된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각국이 취한 조치 관련 정보 및 이러한 관점에서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 (b) 동 결의 8항에 의해 부과된 조치 위반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시행한다.
 - (c) 9항 및 10항에서 제시된 의무 면제 요청을 검토하고 결정한다.
 - (d) 8(a)(i) 및 8(a)(ii)의 목적을 위한 추가적인 품목, 물자, 장비, 상품, 기술을 결정한다.
 - (e) 8(d) 및 8(e)에서 부과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개인 및 단체를 지정한다.
 - (f) 동 결의에서 부과한 조치의 이행 촉진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한다.

- (g) 최소한 매 90일마다 특히 8항상 조치의 효율성 강화 방안 등 관찰 및 권고를 포함한 위원회의 작업에 관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한다.
13.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및 미국에 의해 발표된 2006.9.19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을 목적으로, 긴장을 강화 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자제시키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진 시킬 수 있는 모든 관련 국가의 외교적인 노력을 환영하고 더욱 장려한다.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제조건없이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고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및 미국에 의해 발표된 2006.9.19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동 결의 규정의 이행 상황에 비추어 그 시점의 필요에 따라 조치의 강화, 조정, 중지 또는 해제 등을 포함한 상기 8조에 포함된 조치의 적절성을 검토할 것임을 확인 한다.
16.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결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17. 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류됨을 결정한다.

붙임 2.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874호 비공식 번역본

안보리는,

안보리 결의 825호(1993), 1540호(2004), 1695호(2006), 특히, 1718호(2006)를 포함한 이전 관련 결의들과 2006년 10월 6일 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6/41) 및 2009년 4월 13일 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9/7)을 상기하며,

핵·생화학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09년 5월 25일 (현지시각) 1718호를 위반하여 행한 핵실험과, 동 핵실험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2010년 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범세계적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며, 역내외의 평화와 안정에 야기하는 위협이라는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

NPT에 대한 우리 모두의 지지와 모든 방면에서 NPT를 강화하기 위한 공약, 그리고 핵 비확산 및 군축을 향한 범세계적 노력을 강조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NPT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핵보유국 지위를 보유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NPT 탈퇴 선언과 핵무기 추구를 개탄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여타 안보 및 인도적 우려에 대해 호응해야 하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되는 조치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의도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실험 및 미사일 활동이 역내외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평화와 안보의 명백한 위협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규정하며,

모든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들을 지지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유엔 헌장 7장하에 행동하며, 41조에 따라 조치들을 취하기로 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09년 5월 25일 (현지시각) 핵실험은 관련 결의들, 특히, 안보리 결의 1695호 및 1718호와 2009년 4월 13일 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9/7)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condemn)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어떤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하지 않도록 요구(demand)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대한 기존 약속을 재확립하도록 결정(decide)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특히 1718호를 포함한 관련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하도록 요구(demand)한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NPT 탈퇴 선언을 즉각 철회하도록 요구(demand)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NPT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유념하면서, 조속한 시일내 NPT 및 IAEA 안전조치에 복귀하도록 요구(demand)하고, NPT 모든 당사국이 동 조약상 의무를 계속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underline)한다.
7. 모든 회원국들이 1718호에 의거 설립된 (제재)위원회가 2009년 4월 13일 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9/7)에 따라 지정한 (제재) 대상을 포함한 1718호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call upon)한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과, NPT에 의거 당사국들에 적용되는 의무와 IAEA 안전조치 협정(IAEA INFCIRC/403)의 규정 및 조건들에 따라 엄격히 행동할 것과, 또한, IAEA측이

요구하고,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개인, 문서, 장비, 시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상기 요건을 상회하는 투명성 조치를 IAEA에 제공할 것을 결정(decide)한다.

9. 1718호 8항 (b)호의 (제재)조치들이 모든 무기와 관련 물품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기 또는 물품의 공급, 제조, 정비 또는 사용과 관련된 금융 거래, 기술 훈련, 자문, 역무 또는 지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decide)한다.
10. 1718호 8항 (a)호의 (제재)조치들이 소형무기와 관련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무기와 관련 물품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기의 공급, 제조, 정비, 사용과 관련된 금융 거래, 기술 훈련, 자문, 역무 또는 지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decide)한다. 또한,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 소형무기를 직접·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데 대해 주의하도록 촉구(call upon)하고, 동 공화국에 대한 소형무기의 판매, 공급, 이전시 최소한 5일전에는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결정(decide)한다.
11. 모든 국가들이 항구 및 공항을 포함한 자국 영토내에서 자국의 국내법적 권한과 입법 및 국제법에 따라 1718호 8항 (a), (b), (c)호나 금번 결의 9, 10항의 엄격한 이행을 목적으로 이러한 조항들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 모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행 및 동 공화국발 화물을 검색하도록 촉구(call upon)한다.
12. 모든 회원국들이 1718호 8항 (a), (b), (c)호나 금번 결의 9, 10항의 엄격한 이행을 목적으로 이러한 조항들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 공해상에서 기국의 동의하에 선박을 검색하도록 촉구(call upon)한다.
13. 모든 국가들이 금번 결의 11, 12항에 따른 검색에 협조하여야 하고, 만일 기국이 공해상 검색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국은 해당 선박을 적절하고 편리한 항구로 유도하여, 현지 당국이 11항에 따른 필요한 검색을 하도록 촉구(call upon)한다.

14. 모든 회원국들이 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당사국으로서의 의무 뿐만 아니라 1540호를 포함한 적용 가능한 안보리 결의상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으로 금번 결의 11, 12, 13항에 따른 검색을 통해 1718호 8항 (a), (b), (c)호나 금번 결의 9, 10항에 따라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들을 적발한 경우, 이를 압류, 처분하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 협력하기로 결정(decide)한다.
15. 모든 회원국들이 금번 결의 11, 12, 13항에 따른 검색이나, 14항에 따른 화물 압류, 처분을 할 때에는 동 검색, 압류, 처분에 관한 상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위원회에 즉시 제출하도록 요청(require)한다.
16. 모든 회원국들이 금번 결의 12, 13항에 따른 가국의 협조를 받지 못할 때에는 관련 상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위원회에 즉시 제출하도록 요청(require)한다.
17. 회원국들이 1718호 8항 (a), (b), (c)호나 금번 결의 9, 10항에 따라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운반하고 있다는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 자국민들에 의해 또는 자국 영토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박에 대한 유류, 물품 또는 기타 편의 제공 등과 같은 “선박 지원 서비스”(bunkering service)를 금지하기로 결정(decide)한다. 다만, 동 서비스는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 필요하거나, 화물 검색과 압류, 처분을 할 때까지는 허용될 수 있으며, 동 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적법한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underline)한다.
18. 회원국들이 1718호 8항 (d), (e)호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추가하여, 자국 영토(자국 영토로, 자국 영토를 통해, 자국 영토로부터)에서, 자국 국민, 자국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들(해외지사 포함), 자국내 개인 또는 금융기관들에 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탄도미사일·여타 WMD와 관련된 프로그램활동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서비스의 제공이나, 어떠한 금융·여타 자산 또는 재원의 이전을 금지하도록 촉구(call upon)한다. 여기에는 회원국들이 국내법적 권한과 입법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

·활동과 연관된 회원국들의 영토·장래 영토내에 또는 관할권·장래 관할권내에 있는 금융·여타 자산 또는 채권들을 동결하고, 모든 유사한 거래들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모니터링을 적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19. 모든 회원국들과 국제 금융·신용기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의 필요를 직접 해소하는 인도주의 또는 개발상의 목적이나, 비핵화 증진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 공화국에 대한 무상원조, 금융 지원, 양허성 차관 계약을 신규 체결하지 않고, 기존 계약은 줄여 나가도록 주의를 강화할 것을 촉구(call upon)한다.
20. 모든 회원국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탄도미사일·여타 WMD와 관련된 프로그램·활동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동 공화국과의 무역을 위한 공적 금융 지원(자국 국민 또는 이러한 무역과 연관된 단체에 대한 수출신용, 보증, 또는 보험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촉구(call upon)한다.
21. 모든 회원국들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 외교공관들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1718호 8항 (a)호 (iii)목과 8항 (d)호의 규정(제재조치)을 준수하여야 함을 강조(emphasize)한다.
22. 모든 회원국들이 동 결의가 채택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번 결의 18, 19, 20항에 명시된 금융 조치 뿐만 아니라, 1718호 8항과 금번 결의 9, 10항의 규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들에 대해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촉구(call upon)한다.
23. 1718호 제8항 (a), (b), (c)호상의 조치들이 INFCIRC/254/Rev.9/Part 1a와 INFCIRC/254/Rev.7/Part 2a에 열거된 품목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decide)한다.
24. 단체, 물품, 개인들의 지정을 포함한 1718호 8항과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되는 조치들을 조정하기로 결정(decide)하고, 이를 위해 위원회가 관련 작업을 하여 금번 결의 채택 후 30일 이내에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지시

(direct)한다. 만일 위원회가 동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안보리가 이에 관한 보고서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기 조치들의 조정 작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결정(decide)한다.

25. 위원회는 2009년 7월 15일까지 안보리에 이행, 조사, 아웃리치, 대화, 지원·협력에 관한 작업 프로그램 제출을 통해, 1718호, 2009년 4월 13일 안보리 의장성명과 금번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금번 결의 10, 15, 16, 22항에 따른 회원국들의 보고서를 접수, 심의하도록 결정(decide)한다.
26. 유엔 사무총장에게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우선 1년동안 7명의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도록 하고, 동 전문가 그룹이 위원회의 감독하에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요청(request)한다.
 - (a) 1718호에 명시된 위원회의 임무와 금번 결의 26항에 명시된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조력한다.
 - (b) 특히, 불이행 사례 등 1718호와 동 결의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들의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국가, 관련 유엔 기관 및 여타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수집, 조사, 분석한다.
 - (c) 안보리, 위원회 및 회원국들에게 조치들을 권고하며, 1718호와 금번 결의에 따라 부과된 조치의 이행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한다.
 - (d) 금번 결의가 채택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안보리에 중간 보고서와, 임무 종료 30일 이전에 안보리에 결과 및 권고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27. 모든 국가들과 관련 유엔 기관 및 여타 이해 당사자들은 특히, 1718호와 금번 결의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들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제공하는 등 위원회 및 전문가그룹과 완전히 협조할 것을 촉구(urge)한다.
28. 모든 회원국들이 자국 영토내에서 또는 자국 국민들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확산 민감 핵활동과 핵무기 운반체제 개발 관련 특수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관해 주의하도록 촉구(call upon)한다.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최대한 조속히 가입하도록 촉구(call upon)한다.
30. 평화적 대화를 지지(support)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6자회담에 전제조건 없이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call upon)하며,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이 합의한 2006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및 10.3 공동 문건을 완전하고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촉구(urge)한다.
31. 금변 사태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공약을 표명(express)하고, 안보리 이사국과 회원국들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포괄적인 해결 증진과 긴장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어떠한 조치도 자제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welcome)한다.
3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동 공화국에 의한 1718호 8항과 금변 결의 관련 규정들의 준수 여부에 따라 향후 필요할지도 모르는 (제재) 조치들의 강화, 조정, 중지 또는 해제를 포함하여, 1718호 8항과 금변 결의 관련 조항들에 포함된 조치들의 적절성을 검토해 나갈 준비가 되어야 함을 확인(affirm)한다.
33.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별도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underline)한다.
34. 동 사안이 계속 안보리에 계류됨을 결정(decide)한다.

붙임 3.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094호 비공식 번역본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825호(1993), 1540호(2004), 1695호(2006), 1718호(2006), 1874호(2009), 1887호(2009), 2087호(2013)를 포함한 이전 관련 결의들과 2006년 10월 6일 의장성명(S/PRST/2006/41), 2009년 4월 13일 의장성명(S/PRST/2009/7) 및 2012년 4월 16일 의장성명(S/PRST/2012/13)을 상기하며(recall),

핵,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하며(reaffir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여타 안보 및 인도주의적 우려에 호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underlin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13년 2월 12일 (현지시각)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및 2087호(2013)를 위반하여 행한 핵실험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핵실험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범세계적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 데 대해, 그리고 동 핵실험이 역내외의 평화와 안정에 야기하는 위협이라는 데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ing the graves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교관계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부여하는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고 있음을 우려하며(concerned),

확산 관련 선별적 금융제재에 관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신규 권고 7을 환영하고(welcome), (유엔) 회원국들이 확산 관련 선별적 금융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동 기구의 권고 7에 대한 해석안내서(Interpretative Note) 및 관련 지침문서들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며(urg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역내외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는 데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its gravest con-

cern),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규정하며(determine),

유엔 헌장 7장하에 행동하고(act), 41조에 따른 조치들을 취하면서,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13년 2월 12일 (현지시각) 핵실험은 관련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진행하지 말 것을 결정한다(decide).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NPT 탈퇴 선언을 즉각 철회하도록 요구한다(demand).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NPT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유념하면서, 조속한 시일내 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복귀하도록 또한 요구하며(demand), NPT 모든 당사국이 동 조약상 의무를 계속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underline).
5. 우리는 농축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진행 중인 모든 핵 활동을 규탄하고(condemn),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및 2087호(2013)에 대한 위반이라는 데 주목하며(not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과, NPT에 의거 당사국들에 적용되는 의무와 IAEA 안전조치 협정(IAEA INFCIRC/403)의 규정 및 조건들에 따라 엄격히 행동해야 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현존하는 모든 여타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 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7. 결의 1718호(2006) 8항 (c)호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결의 1718호(2006) 8항 (a)호 (i)목과 8항 (a)호 (ii)목 그리고 결의 1874호(2009) 9항과 10항에 의해 금지된 품목에 적용됨을 재확인하며(reaffirm), 결의 1718호(2006) 8항 (c)호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금번 결의 20항과 22항에도 적용됨을 결정 하고(decide), 이러한 조치들이 금지 품목의 조달, 유지 또는 사용을 다른 국가에서 주선하는 것이나, 다른 국가에 대한 공급, 판매 또는 이전, 또는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출을 주선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중개 또는 여타 매개 서비스에도 적용된다는 데 유의한다(note).
8.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의 조치들이 금번 결의 부속서 I과 II의 개인과 단체,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됨을 또한 결정한다(decide).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의 조치들이 기지정된 개인과 단체를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 에도 적용됨을 또한 결정한다(decide).
9. 결의 1718호(2006) 8항 (e)호의 조치들이 금번 결의 부속서 I의 개인에게도 적용되며, 이들을 대신하거나 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10. 결의 1718호(2006) 8항 (e)호의 조치들과 결의 1718호(2006) 10항에 규정된 예외들이 기지정된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 동하는 개인, 그리고 제재의 회피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의 조항들의 위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가 결정하는 개인에게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이러한 개인이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일 경우, 국가들은 동 조항이 유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들의 유엔 본부로의 이동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동 개인의 출석이 사법절차의 진행을 위해 요청되거나 오직 의료, 안전 또는 기타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개인을 적용가능한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으로의 송환을 목적으로 자국 영토에서 추방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1. 회원국들이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와 8항 (e)호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추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또는 자국 영토에 대해, 자국 영토를 통해 또는 자국 영토로부터 이루어지거나, 자국 국민, 자국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해외지부 포함), 자국 영토 내 개인 또는 금융기관에 대해 또는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량현금(bulk cash)을 포함한 어떠한 금융·여타 자산 또는 재원의 제공을 방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여기에는 회원국 권한과 법령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 및 활동과 연관된 자국의 영토 내 있거나, 장래 자국의 영토 내로 들어오거나, 자국 관할권 내에 있거나, 장래 관할권 내로 들어오는 어떠한 금융·여타 자산 또는 재원들도 동결하고, 모든 유사한 거래들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모니터링을 적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12. 국가들이 해당 활동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 금융 서비스의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들이 자국 영토에 신규 지점, 자회사 또는 대표 사무소를 개소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call upo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들이 자국 관할권 내 은행과 신규 합작투자를 설립하거나, 자국 관할권 내 은행의 지분을 매수하거나, 자국 관할권 내 은행과 환거래 관계를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또한 촉구한다(call upon).
13. 국가들이 해당 금융 서비스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 자국 영토 또는 자국 관할권 내에 있는 금융기관

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대표 사무소나 자회사, 또는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량현금의 이전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concern), 모든 국가들이 대량현금의 이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하지 않도록 금번 결의 11항의 조치들을 현금 수송자(cash courier)에 의한 이전을 포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발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행 현금 이전에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한다(clarify).
15. 모든 회원국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또는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이러한 무역과 연관된 자국 국민 또는 단체에 대한 수출신용, 보증 또는 보험 제공을 포함)을 제공하지 말 것을 결정한다(decide).
16. 모든 국가들이 자국 영토 내에 있거나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모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발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행 모든 화물,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중개하였거나 이전을 촉진한 모든 화물에 대하여, 해당 화물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또는 금번 결의에 따라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 상기 조항들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동 화물을 검색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7. 어떠한 선박이 그 선박의 기국에 의해 검색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검색을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선박이 결의 1874호(2009) 12항에 따른 검색을 거부할 경우, 동 선박의 입항이 검색을 위해 필요하거나, 비상사이거나, 출발지 항구로 회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들이 동 선박에 대해 자국 항구로의 입항을 거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선박에 의해 검색을 거부당한 국가들은 동 사건을 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할 것을 또한 결정한다(decide).
18. 국가들이 어떠한 항공기가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또는 금번 결의상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 비상착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항공기의 자국 영토 내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불허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19. 모든 국가들이 항공기와 선박의 개명 또는 재등록을 포함하여 제재를 회피하거나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또는 금번 결의 조항들을 위반하기 위해 다른 회사로 이전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항공기 또는 선박과 관련된 어떠한 가용 정보도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고(request), 위원회가 동 정보를 널리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request).
20. 결의 1718호(2006) 8항 (a)호 및 8항 (b)호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금번 결의 부속서 III의 품목, 물질, 장비, 물자 및 기술에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21. 위원회가 금번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연례적으로, 결의 2087(2013) 5항 (b)호에 지정된 목록들에 포함된 품목들을 검토하고 갱신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만일 위원회가 그때까지 동 정보를 갱신하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보리가 30일의 추가 기간 내에 동 작업을 완료하도록 결정한다(decide).
22.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국가가 결정하는 어떠한 품목에 대하여 그 원산지와 관계없이 자국 영토를 통하여 또는 자국인에 의하여,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으로,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촉구하고 허용한다(call upon and allow). 위원회가 동 조항의 적절한 이행에 관한 이행 안내서(Implementation Assistance Note)를 발간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23. 결의 1718호(2006) 8항 (a)호 (iii)목에 의해 부과된 사치품 관련 조치들을 재확인하고(reaffirm), “사치품”이라는 용어가 금번 결의 부속서 IV에 명시된 품목들을 포함하되 이러한 품목들에 한정되지는 않음을 명확히 한다(clarify).
24.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 사절단원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하지 않도록 이들 개인들에 대해 강화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25. 모든 국가들이 금번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번 결의의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들에 대해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촉구하고 (call upon), 결의 1874호(2009)에 의하여 설치된 전문가 패널이 다른 유엔 제재 감시 그룹들과 협력하여 국가들이 이러한 보고서를 적시에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한다(request).
26. 모든 국가들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대한 불이행 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27. 위원회가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서 결정된 조치들에 대한 위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과,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의 대상이 될 개인과 단체를 추가 지정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한 어떠한 개인(결의 1718호(2006) 8항 (d)호와 8항 (e)호의 조치를 위해)과 단체(결의 1718호(2006) 8항 (d)호의 조치 적용을 위해)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결정한다(decide).
28. 결의 1718호(2006) 12항에 명시된 위원회의 임무가 결의 1874호(2009)와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에 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29. 결의 1874호(2009) 26항에 제시된 작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동 조항에 의하여 위원회의 감독 하에 전문가 패널이 설치된 점을 상기하며(recall), 결의 2050호(2012)에 따라 갱신된 바 있는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2014년 4월 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고(decide), 동 패널의 임무가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대하여 적용됨을 또한 결정한다(decide). 금번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패널의 임무를 검토하고, 임무의 추가 연장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의도를 표명하고(express its intent), 이를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최대 8명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며(request), 위원회가 패널과의 협의를 통해 패널의 보고 일정을 조정할 것을 요청한다(request).
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이 금번 결의와 기존 결의들이 부과한 조치를 사유로 금지된 어떠한 계약 또는 여타 거래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서 부과된 조치를 위해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이들을 통하거나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인의 의뢰로 보상 청구(claim)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emphasize).

31.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의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underline).
32. 모든 회원국들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 외교공관들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1718호 8항 (a)호 (iii)목과 8항 (d)호의 조항들을 준수하여야 함을 강조한다(emphasize).
33.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express),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고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한다(welcome).
34.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reaffirm), 동 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며 (call for), 모든 참가국들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이 발표한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을 완전하고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한다(urge).
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조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affirm),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들(further significant measures)을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express its determination).
37. 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속 계류됨을 결정한다(decide).

부속서 I

여행금지 및 자산 동결

1. 연정남

- a. 설명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대표이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는 2009년 4월 위원회가 지정한 단체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된 무기 거래업체이자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와 관련된 물자와 장비의 주요 수출업체이다.

2. 고철재

- a. 설명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부대표이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는 2009년 4월 위원회가 지정한 단체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된 무기 거래업체이자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와 관련된 물자와 장비의 주요 수출업체이다.

3. 문정철

- a. 설명 : 문정철은 단천상업은행의 관리로서 동 은행의 거래를 지원해 왔다. 단천상업은행은 2009년 4월 위원회가 지정한 단체로서, 재래식 무기, 탄도미사일 및 이들의 조립과 제조에 관련된 물품의 판매를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요 금융단체이다.

부속서 II

자산 동결

1. 제2자연과학원

- a. 설명 : 제2자연과학원은 미사일과 아마도 핵무기를 포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진 무기체계 연구 및 개발을 임무로 하는 국가 차원의 조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사일과 아마도 핵무기 프로

그럼에 사용될 기술, 장비 및 정보를 해외로부터 입수하기 위해, 조선단군 무역회사를 포함한 일련의 산하조직을 이용한다. 조선단군무역회사는 2009년 7월 위원회가 지정한 단체로서, 관련 다자통제레짐이 통제금지하고 있는 물질을 포함한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체계 프로그램 및 조달 등(단, 이에 한정되지는 않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 연구 및 개발(R&D)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제품 및 기술의 조달을 주된 임무로 하는 단체이다.

b. 별칭 : 2ND ACADEMY OF NATURAL SCIENCES; CHE 2 CHAYON KWAHAKWON; ACADEMY OF NATURAL SCIENCES; CHAYON KWAHAK-WON; NATIONAL DEFENSE ACADEMY; KUKPANG KWAHAK-WON; SECOND ACADEMY OF NATURAL SCIENCES RESEAEERCH INSTITUTE; SANSRI

c. 소재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

2. 조선종합설비수출입회사

a. 설명 : 조선용봉총회사는 조선종합설비수출입회사의 모(母)회사이다. 조선용봉총회사는 2009년 4월 위원회가 지정한 단체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산업을 위한 조달 및 군수 관련 판매 지원에 특화된 국방 복합기업이다.

b. 소재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 보통강구역 락원동

부속서 III

품목, 물질, 장비, 물자 및 기술

핵 품목

1. 불소화 처리된 윤활유

○ 진공펌프와 압착 베어링을 윤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낮은 증기

압력을 가지며 가스원심분리공정에 사용되는 가스 형태의 우라늄복합물인 육불화우라늄(UF₆)에 대한 (부식) 저항성이 있으며, 펌핑 불소에 사용된다.

2. 벨로우즈 씰 밸브

- 벨로우즈 씰 밸브는 우라늄 농축시설(가령, 가스원심분리 및 가스확산 공장), 가스원심분리공정에 사용되는 가스 형태의 우라늄복합물인 육불화우라늄(UF₆)을 생산하는 시설, 핵연료제조시설 및 삼중수소 취급 시설 등에 사용될 수 있다.

미사일 품목

1. 특수 부식 저항성 강판- 질소 안정화된 듀플렉스 스테인리스 강(N-DSS)과 같이 IRFNA(질산의 일종) 또는 질산에 저항성을 가지는 강판에 제한
2. 초고온 세라믹 복합물질로서, 고체형태(블록, 실린더, 튜브, 주형)이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
 - a. 지름이 120mm 이상 길이가 50mm 이상인 실린더
 - b. 내경이 65mm 이상, 벽의 두께가 25mm이상, 길이가 50mm 이상인 튜브
 - c. 120mm×120mm×50mm 이상 크기의 블록
3. 파이로테크닉으로 작동되는 밸브
4. 풍동에 사용 가능한 측정 및 통제 장비(균형, thermal stream 측정, 유동 제어)
5. 과염소산나트륨(Sodium Perchlorate)

화학무기 목록

1. 제조자 규정 최대유량이 1m³/h을 초과하는 진공펌프(표준 온도 및 압력 조건하)와 케이싱(펌프 몸체), 케이싱 라이너, 임펠러, 회전자(rotor) 또는

제트펌프 분사기로서, 처리 중인 화학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표면이 통제되는 소재로 만들어진 것

부속서 IV

사치품

1. 보석제품

- a) 진주가 있는 보석제품
- b) 보석
- c) 보석용 원석 및 준보석용 원석(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포함)
- d) 귀금속의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보석제품

2. 아래의 이동수단 품목

- a) 요트
- b) 고급 자동차 : 스테이션 왜건을 포함하여, (대중교통이 아닌) 사람의 이동에 쓰이는 자동차
- c) 경주용 차

붙임 4.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70호 비공식 번역본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825호(1993), 1540호(2004), 1695호(2006), 1718호(2006), 1874호(2009), 1887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를 포함한 기존 관련 결의들과, 2006년 10월 6일 의장성명(S/PRST/2006/41), 2009년 4월 13일 의장성명(S/PRST/2009/7), 2012년 4월 16일 의장성명(S/PRST/2012/13)을 상기하며(recall),

핵,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하며(reaffir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를 위반하여 2016년 1월 6일 행한 핵실험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핵실험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범세계적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 데 대해, 그리고 동 핵실험이 역내외의 평화와 안정에 야기하는 위협에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graves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여타 안보 및 인도적 우려에 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underline),

또한,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underlin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금융·기술·산업 자원을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regret),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 개발 의도를 선언한 것을 규탄하며(condem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이 처한 중대한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deep concern),

주민들의 필요가 심히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기판매가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목적으로 전용되는 수익을 창출해 왔음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grea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14년과 2015년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2015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출 시험을 통해 계속해서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serious concern), 이러한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운반수단 개발에 기여하고 역내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 주목하며(not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교관계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부여하는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고 있음에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continued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역내외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다는 데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its gravest concern),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규정하며(determine),

유엔 헌장 7장 하에 행동하고(act), 41조에 따른 조치들을 취하며(take measures),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16년 1월 6일 핵실험을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히 규탄하며(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또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고 안보리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를 심각하게 위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16년 2월 7일 발사를 규탄한다(further condemn).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감행하지 말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공약을 재확립해야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하고(reaffir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즉각 이러한 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demand).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현존하는 모든 여타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5. 결의 1718호(2006) 8항 (c)호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은 핵, 탄도미사일 또는 여타 대량파괴무기와 관련된 품목, 물질, 장비, 물품, 기술의 제공, 생산, 유지 또는 사용과 관련된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또는 지원이,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영토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거나,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에 의해 또는 그 영토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을 재확인하며(reaffirm), 본 조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비록 위성발사나 우주발사체로 규정될지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와 관련하여 여타 회원국들과 어떠한 형태의 기술협력에도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을 강조한다(underscore).
6. 결의 1718호(2006) 8항 (a)호에 따른 조치가 소형무기(small arms and light weapons)와 관련 물품을 포함하는 모든 무기와 관련 물품 및 이들의 제공, 생산, 유지 또는 사용에 관련된 금융거래,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또는 지원에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7. 결의 1718호(2006) 8항 (a)호, (b)호, (c)호에 의해 부과되고, 결의 1874호(2009) 9항 및 10항에 의거하여 확대된 의무는, 소유권이나 통제권 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수리, 점검, 정비, 시험, 역설계, 판매홍보를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발 품목의 운송에 적용됨을 확인하며(affirm), 결의 1718호(2006) 8항 (e)호에 규정된 조치들이 본 조항에 기술된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여행하는 어떠한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한다(underscore).
8. 결의 1718호(2006) 8항 (a)호 및 8항 (b)호에 의해 부과된 조치는 식료품과 의약품은 제외하고, 국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 작전능력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하는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밖의 다른 회원국의 군사 작전능력 발전을 지원하거나 강화하는 수출에 대해 적용됨을 결정하며(decide), 아래의 경우 품목의 공급, 판매, 이전이나 조달에 본 조항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을 결정한다(decide) :

- a) 국가가 해당 활동이 오직 인도적 목적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인이나 단체가 수익 창출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민생 목적으로서, 또한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되는 어떤 활동과도 관련이 없음을 결정하고, 국가가 사전에 이러한 결정을 위원회에 통보하고, 동 품목이 여타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 또한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 또는
 - b) 위원회가 사안별로, 특정 공급, 판매 또는 이전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
9. 결의 1874호(2009) 9항에 따라, 국가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무기와 관련 물품의 제공, 생산, 유지 또는 사용에 관련된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또는 지원을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을 상기하며(recall), 본 조항은 국가들이 군사, 준군사 또는 경찰 관련 훈련을 목적으로 교관, 자문관 또는 여타 공무원을 초청하는 것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clarify).
10.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에 규정된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I 과 II의 개인과 단체,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경우를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11. 결의 1718호(2006) 8항 (e)호의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I 의 개인,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12.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의 “경제 자원”이 유형 또는 무형, 동산 또는 부동산, 실재 또는 잠재 자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운송수단(선박 포함)과 같은 자금, 물품 또는 서비스의 획득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포함한다는 것을 확인한다(affirm).
13. 회원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관, 정부대표 또는 정부 자격으로 행동하는 여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제재의 회피를 지원하거나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의 조항들을 위반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본 조항이 유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들의 유엔 본부 및 다른 유엔 시설로의 이동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회원국은 적용 가능한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 송환을 목적으로 동 개인을 자국 영토에서 추방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본 조항의 규정들이 아래의 특정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한다(decide) :
 - a) 동 개인의 출석이 사법절차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b) 동 개인의 출석이 오직 의료, 안전 또는 기타 인도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 c) 위원회가 사안별로 동 개인의 추방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는 경우
14. 회원국이 자국민이 아닌 개인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거나, 또는 제재의 회피를 지원하거나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의 조항들을 위반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회원국들은 본 조항이 유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들의 유엔 본부 및 다른 유엔 시설로의 이동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동 개인의 출석이 사법절차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오직 의료, 안전 또는 기타 인도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위원회가 사안별로 동 개인의 추방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 가능한 국내 법과 국제법에 따라 동 개인의 국적국으로의 송환을 목적으로 동 개인을 자국 영토에서 추방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5.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와 결의 2094호(2013) 8항 및 11항에 의해 부과된 의무 이행의 결과로서, 모든 회원국들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단체의 대표사무소를 폐쇄해야하고, 동 단체 및 직·간접적으로 이들의 이익을 위하거나 이들을 대신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합작 투자 또는 여타 사업 관계에 참여를 금지해야 함을 강조하고(underscore), 동 사무소의 대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인 경우, 국가들은 적용 가능한 국내 법 및 국제법, 결의 2094호(2013) 10항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 송환을 목적으로 동 개인을 자국 영토에서 추방해야 함을 강조한다(underscore).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관련 안보리 결의에서 부과된 조치를 위반할 목적으로 위장 회사, 유령 회사, 합작 투자 및 복잡하고 불투명한 소유 구조를 빈번히 사용하는 것을 주목하고(note), 이런 점에서 위원회가 패널의 지원을 받아 그러한 관행에 관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파악하고, 적절한 경우 이들을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및 본 결의에서 부과된 조치의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지시한다(direct).
17. 모든 회원국이 자국 영토 내에서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확산 민감 핵 활동 또는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분야에 특화된 교육 또는 훈련을 시키는 것을 방지할 것을 결정하며(decide), 여기에는 고급 물리학, 고급 컴퓨터 시뮬레이션 및 관련 컴퓨터 과학, 지리공간 항법(geospatial navigation), 핵공학, 항공우주 공학, 비행 공학(aeronautical engineering) 및 관련 분야(related discipline)가 포함된다.
18. 모든 국가는 어떠한 품목도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를 위반하여 이전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공항, 항구, 자유무역지대를 포함하여 자국 영토 내에 있거나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화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출발하였거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목적지로 하는 화물,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 또는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들이나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가 중개하였거나 이전을 촉진한 화물,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항공기나 선박을 통해 운송되고 있는 화물을 검색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국가들이 인도적 목적이라고 국가가 결정하는 화물의 이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검색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19. 회원국들은 자국 국민과 자국 영토 내에 있는 개인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임대하거나 전세(charter)를 주는 것, 또는 승무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동 금지가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 여타 어떠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단체, 또는 제재의 회피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 조항의 위반을 지원한 것으로 국가가 결정하는 여타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 앞서 기술된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 앞서 기술된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어떠한 단체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결정하며(decide), 회원국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소유, 운영 또는 승무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call upon), 회원국들이 본 조항에 따라 다른 회원국이 등록을 취소한 어떠한 선박도 등록하지 않을 것을 또한 촉구하며(call upon), 본 조항이 시안별로 아래 정보들과 함께 위원회에 사전 통보된 임대, 전세 또는 승무원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한다(decide) :

- a) 그러한 활동들이 오직 민생 목적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인이나 단체의 수익 창출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
- b) 그러한 활동들이 앞서 기술된 결의들의 위반에 기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들에 대한 정보

20. 모든 국가들이 자국 국민, 자국 관할권 내에 있는 개인과 자국 영토 내에 설립되었거나 자국 관할권 내에 있는 단체가 북한에서 선박을 등록하는 것, 선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취득하는 것,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의 어떠한 선박에 대해서도 소유, 임대, 운영, 선급 · 인증서 또는 부가서비스(associated service) 제공 또는 보험 보장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동 조치는 활동에 관한 상세 정보가 위원회에 제공되어 위원회가 사안별로 사전 통보한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하며(decide), 이러한 정보는 관련된 개인과 단체의 이름, 그러한 활동들이 오직 민생 목적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인이나 단체의 수익 창출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 그리고 그러한 활동들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의 위반에 기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21. 모든 국가들이 어떠한 항공기가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 검색을 위한 착륙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비상 착륙을 제외하고는 동 항공기의 자국 영토 내 이 · 착륙 및 영공 통과를 불허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모든 국가들이 영공통과 허가 여부를 고려할 때 이미 알려져 있는 위험 요소들을 평가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22. 모든 회원국들이 선박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직 · 간접적으로 소유 · 통제되거나,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에 따라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화물을 적재하고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 비상시이거나 출발지 항구로 회항하거나 검색을 위해 입항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위원회가 인도적 목적을 위해 또는 본 결의의 목표에 부합하는 여타 목적을 위해 입항이 필요하다고 사전에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선박에 대해 자국 항구로의 입항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23. 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원양해운관리회사(OMM)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음을 상기하고(recall), 본 결의 부속서 III에 기술된 선박들이 OMM에 의해 통제되거나 운영되는 경제 자원이며, 따라서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에 의해 부과된 자산동결 대상에 해당됨을 주목하며(note), 회원국들이 본 결의 관련 조항들을 이행해야 함을 강조한다(underscore).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모든 화학 및 생물 무기와 무기 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생물무기금지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에 엄격히 부합하도록 행동해야 함을 결정하고(decid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화학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하고, 협약의 규정을 즉각적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calls upon).
25. 추가적인 품목의 지정을 통해 결의 1718호(2006) 8항 및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조정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위원회가 이를 위한 작업을 수행하고 본 결의 채택후 15일 이내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또한 만일 위원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안보리가 보고를 수령한 후 7일 내에 조치를 조정하는 작업을 완료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26. 위원회가 본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연례적으로, S/2006/853/CORR.1에 포함된 품목들을 검토하고 갱신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27. 결의 1718호(2006) 8항 (a)호 및 8항 (b)호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기타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의 회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국가가 결정하는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28. 결의 1874호(2009) 14항부터 16항 및 결의 2087호(2013) 8항을 재확인하고(reaffirm), 동 조항들이 본 결의 18항에 따른 검색에 의해 판명된,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이 금지된 어떠한 품목에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석탄, 철, 철광석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되며,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해당 물질을 조달하는 것을 방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본 조항은 아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결정한다(decide) :

- a) 국가가 사전에 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거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을 위한 수익 창출과 무관하다는 것을 조건으로, 석탄을 조달하는 국가가 신뢰할 만한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석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밖을 원산지로 하고, 오직 나진(나선)항으로부터 수출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통해 이송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석탄
- 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을 위한 수익 창출과 무관하며 오로지 민생 목적임이 결정된 거래

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금, 티타늄광, 바나듐광 및 희토류를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되며, 모든 국가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하여,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해당 물질을 조달하는 것을 방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31. 모든 국가들은 위원회가 검증된 필수적인 인도적 필요를 위해, 전달과 사용의 효과적 감독을 위한 특정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사안별로 예외적 사전 승인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 국민에 의하여 또는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항공기용 가솔린, 나프타식 제트연료, 케로신식 제트연료, 케로신식 로켓연료를 포함하는 항공유를, 자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로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것을 방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또한 본 조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밖에서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향하거나 회향하는데 소비할 목적으로 민간 여객기에 항공유를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결정한다(decide).

32.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에 의해 부과된 자산동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또는 조선노동당의 기구(entities) 또는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과 단체, 또는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 의해 작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통제되며,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여타 활동과 연계되었다고 판단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밖의 모든 자금, 여타 금융자산 및 경제 자원에도 적용됨을 결정하고(decid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자국 국민 또는 자국 영토 내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하여 위에서 금지된 개인과 단체, 그리고 그들을 대신하거나 그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과 단체 또는 그들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단체에 대해 또는 이들을 위해 그 어떤 자금, 금융자산 및 경제 자원도 제공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아울러 결정하며(decide), 이러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 및 산하 전문기관 및 관련 기관에 파견된 사절 또는 기타 외교 및 영사 사절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금, 여타 금융자산 및 경제 자원, 그리고 위원회가 인도적 지원 제공, 비핵화 또는 본 결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여타 용도를 위해 사안별로 사전 승인을 한 자금, 여타 금융자산 및 경제적 자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을 결정한다(decide).

33. 국가들이 자국 영토 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의 신규 지점, 자회사 또는 대표 사무소의 개설 또는 운영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들이 자국 영토 내 또는

자국 관할권 내 금융기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들과 신규 합작 투자를 설립하거나 은행의 지분을 매입하거나 환거래 관계를 설립 또는 유지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아울러 결정하며(decide), 국가들이 그러한 은행 지점, 자회사 또는 대표 사무소를 폐쇄하고,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과의 합작투자, 지분매입, 환거래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본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34. 국가들이 자국 영토 내 또는 자국 관할권 내 금융기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신규 지점, 자회사 또는 대표 사무소 또는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35. 국가들이 해당 금융 활동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여타 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신뢰할만한 정보가 있는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존재하는 대표 사무소, 자회사 또는 은행계좌를 폐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90일 이내에 취하기로 결정하고(decide), 위원회가 인도적 지원 제공,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외교 사절의 활동, 유엔 및 산하 전문기관 및 관련기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에 부합하는 목적을 위해 해당 대표 사무소, 자회사 또는 은행계좌가 필요하다고 시안별로 사전 승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다(decide).

36. 모든 국가들이 자국 영토 내 또는 자국 관할권 내 개인 또는 단체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8항을 포함한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여타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무역을 위해 공적 및 사적 금융 지원(이러한 무역에 관련된 자국 국민 또는 단체에 대한 수출신용, 보증 또는 보험 제공을 포함)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3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이전되는 금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및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모든 국가들이 그러한 금의 이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도록, 금 운반자(gold couriers)를 통한 이전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또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의 모든 금의 이전에 대해 결의 2094호(2013) 11항에 명시된 조치들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clarify).
38.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국가들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불법적 금융 활동으로부터 자국의 관할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주의 및 효과적 대응책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 점을 상기하면서(recall), 회원국들이 FATF 권고 7, 동 문서의 해석안내서(Interpretative Note) 및 관련 지침문서들을 적용하여 확산 관련 선별적 금융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calls upon).
39. 결의 1718호(2006) 8항 (a)호 (iii)목에 의해 부과된 사치품 관련 조치들을 재확인(reaffirm)하고, “사치품”이라는 용어는 본 결의 부속서 V에서 특정된 품목들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clarify).
40. 모든 국가들이 본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결의의 조항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촉구하고(call upon), 결의 1874호(2009)에 따라 설치된 전문가 패널이 다른 유엔 제재 모니터링 그룹들과 협력하여 국가들이 이러한 보고서를 적시에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하며(request), 안보리가 요청한 이행보고서를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는 회원국들에 대한 아웃리치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위원회에 지시한다(direct).

41. 모든 국가들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되는 조치들의 불이행 관련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42. 관련 결의들, 특히 본 결의 27항의 완전하고 적절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기존에 보고된 제재 위반상황, 특히 관련 결의에 따라 압류된 물품이나 사전 방지된 활동들에 대해 조사할 것을 장려하며(encourage),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패널의 보고 및 위원회가 공개한 제재 위반 관련 정보에 주목한다(note).
43.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및 본 결의에 의해 결정되는 조치들에 대한 위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위원회에 지시하며(direct), 이와 관련하여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및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되는 조치들의 대상이 될 개인과 단체를 추가로 지정할 것을 위원회에 지시한다(direct).
44. 회원국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부과된 조치들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할 것을 위원회에 지시하며(direct),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회원국들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및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모든 조치들을 담은 포괄적인 모음집(compilation)을 작성하여 회람할 것을 요청한다(request).
45. 새로운 가명 및 위장 회사를 포함, 위원회의 개인 및 단체 목록에 포함된 정보를 갱신할 것을 위원회에 지시하며(direct), 본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45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 12개월마다 동 작업을 완료할 것을 위원회에 지시한다(direct).
46. 결의 1718호(2006) 12항에 명시된 위원회의 임무가 결의 1874호(2009), 2094호(2013) 및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4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본 결의 또는 기존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를 이유로 이행되지 않은 어떠한 계약 또는 여타 거래와 관련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에서 부과된 조치를 위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이들 개인 또는 단체를 통하거나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인의 의뢰에 따른 보상 청구(claim)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emphasize).

48.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및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하거나,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경제 활동이나 협력을 포함한 활동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을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에서 지원 및 구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underline).
49.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reiterate),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express commitment),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고,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한다(welcome).
50.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reaffirm), 동 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며(call for),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이 발표한 2005.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들에 대한 지지를 강조한다(reiterate). 동 공약은 6자회담의 목적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는 것이라는 점,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약속하였다(undertake)는 점, 6자회담 참가국들은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약속하였다(undertake)는 점 및 여타 다른 모든 관련 공약들을 포함한다.

5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affirm),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추가 핵실험 또는 발사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들(further significant measures)을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express its determination).
52. 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속 계류됨을 결정한다(decide). 끝.

부속서 I : 여행금지 / 자산동결(개인)

1. 최춘식 (CHOE CHUN-SIK)
 - a. 설명: 제2자연과학원(SECOND ACADEMY OF NATURAL SCIENCES) 원장(director) 역임,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 총책임자(head)
 - b. 별칭: CHOE CHUN SIK, CHOE CH'UN SIK
 -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54.10.12.,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 최성일 (CHOE SONG IL)
 - a. 설명: 단천상업은행 베트남 대표
 - b. 별칭: 미상
 - c. 신원정보: 여권번호: 472320665, 여권만료일: 2017.9.26., 여권번호: 563120356,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3. 현광일 (HYON KWANG IL)
 - a. 설명: 우주개발국 과학개발부장
 - b. 별칭: HYON GWANG IL
 -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1.5.27.,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4. 장범수 (JANG BOM SU)
 - a. 설명: 단천상업은행 시리아 대표
 - b. 별칭: JANG POM SU
 -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57.4.15.,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5. 장용선 (JANG YONG SON)
 - a. 설명: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이란 대표
 - b. 별칭: 미상
 -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57.2.20.,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6. 전명국 (JON MYONG GUK)
 - a. 설명: 단천상업은행 시리아 대표
 - b. 별칭: CHO'N MYO'NG-KUK
 -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76.10.18., 여권번호: 4721202031, 여권만료일: 2017.2.21.,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7. 강문길 (KANG MUN KIL)
 - a. 설명: 남흥으로도 알려진 남천강 대표로서 핵 조달 활동 실시
 - b. 별칭: JIANG WEN-JI
 - c. 신원정보: 여권번호: PS472330208, 여권만료일: 2017.7.4.,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8. 강룡 (KANG RYONG)
 - a. 설명: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시리아 대표
 - b. 별칭: 미상
 -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9.8.21.,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9. 김중중 (KIM JUNG JONG)
 - a. 설명: 단천상업은행 베트남 대표
 - b. 별칭: KIM CHUNG CHONG
 -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6.11.7.,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권번호: 199421147, 여권만료일: 2014.12.29./여권번호: 381110042, 여권만료일: 2016.1.25./여권번호: 563210184, 여권만료일: 2018.6.18.
10. 김규 (KIM KYU)
 - a. 설명: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대외업무 담당관
 - b. 별칭: 미상
 -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8.7.30.,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1. 김동명 (KIM TONG MY'ONG)

- a. 설명: 단천상업은행 회장(PRESIDENT)으로서, 최소 2002년 이래 단천 상업은행 내 다양한 직책을 역임하였으며, 압록강 관련 업무 담당
- b. 별칭: KIM CHIN-SO'K, KIM TONG-MYOMG, KIM JIN-SOK; KIM, HYOK-CHOL
- c. 신원정보: 생년: 1964,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2. 김영철 (KIM YONG CHOL)

- a. 설명: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이란 대표
- b. 별칭: 미상
-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2.2.18.,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3. 고태훈 (KO TAE HUN)

- a. 설명: 단천상업은행 대표
- b. 별칭: KIM MYONG GI
-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72.5.25., 여권번호: 563120630, 여권만료일: 2018.3.20.,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4. 리만건 (RI MAN GON)

- a. 설명: 군수공업부 부장(Minister)
- b. 별칭: 미상
-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45.10.29., 여권번호: PO381230469, 여권만료일: 2016.4.6.,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5. 류진 (RYU JIN)

- a. 설명: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시리아 대표
- b. 별칭: 미상
-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5.8.7., 여권번호: 563410081,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6. 유철우 (YU CHOL U)

- a. 설명: 우주개발국 국장

- b. 별칭: 미상
- c. 신원정보: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별칭 목록 추가 :

라경수(Ra, Kyong-Su) (KPi,008) → 새로운 별칭 : 장명호(Chang, Myung-ho)

부속서 II : 자산동결 (단체)

1. 국방과학원 (ACADEMY OF NATIONAL DEFENSE SCIENCE)
 - a. 설명: 탄도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진전에 관여
 - b. 별칭: 미상
 - c. 위치 : PYONGYANG, DPRK
2. 청천강해운 (CHONGCHONGANG SHIPPING COMPANY)
 - a. 설명: 자회사 선박 청천강 호를 통해 재래식 무기를 2013.7.1. 북한으로 직접 밀반입 시도
 - b. 별칭 : CHONG CHON GANG SHIPPING CO. LTD.
 - c. 위치 : 주소: 817 HAEUN, DONGHUNG-DONG, CENTRAL DISTRICT, PYONGYANG, DPRK / 대체 주소: 817 HAEUM, TONGHUN-DONG, CHUNG-GU, PYONGYANG, DPRK / IMO 번호: 5342883
3. 대동신용은행 (DAEDONG CREDIT BANK (DCB))
 - a. 설명: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및 단천상업은행에 금융서비스 제공, 최소 2007년 이래 KOMID 및 단천상업은행을 대신하여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수백건의 금융거래를 지원(facilitate), 일부 사례에서는 기만적 금융 관행을 사용하여 거래를 고의적으로 지원
 - b. 별칭: DCB, TAEDONG CREDIT BANK
 - c. 위치: 주소: SUITE 401, POTONGGANG HOTEL, ANSAN-DONG, PYONGCHON DISTRICT, PYONGYANG, DPRK/대체주소: ANSAN-DONG, BOTONGGANG HOTEL, PONGCHON, PYONGYANG, DPRK /SWIFT 코드: DCBK KKPY

4. 혜성무역회사 (HESONG TRADING COMPANY)
 - a. 설명: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의 자회사
 - b. 위치: PYONGYANG, DPRK
5. 조선광선은행 (KOREA KWANGSON BANKING CORPORATION (KKBC))
 - a. 설명: 단천상업은행 및 조선연봉총회사(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의 소속회사인 조선혁신무역회사(KOREA HYOKSIN TRADING CORPORATION)에 금융서비스 제공, 단천상업은행은 조선광선은행을 이용해 KOMID와 관련된 거래를 포함하여 수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자금 송금을 지원
 - b. 별칭: KKBC
 - c. 위치: JUNGSON-DONG, SUNGRI STREET, CENTRAL DISTRICT, PYONGYANG, DPRK
6. 조선광성무역회사 (KOREA KWANGSONG TRADING CORPORATION)
 - a. 설명: 조선연봉총회사(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의 자회사
 - b. 위치: RAKWON-DONG, POTHONGGANG DISTRICT, PYONGYANG, DPRK
7. 원자력공업성 (MINISTRY OF ATOMIC ENERGY INDUSTRY)
 - a. 설명: 2013년 북한의 원자력 산업을 현대화하여 핵물질 생산량 확대 및 품질 개선, 독립적인 핵산업 육성 등을 이루기 위해 설립. 북한 핵무기 개발의 핵심 행위자로 알려져 있으며, 북한 핵 프로그램의 일일 운영을 총괄, 산하에 핵관련 조직, 연구소, 2개 위원회(동위원소응용위원회, 핵에너지위원회) 보유. 북한의 플루토늄 시설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연변 소재 핵연구센터에 지침 하달. 2015년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리제선(RI JE-SON)이 2014.4.9. 원자력공업성 책임자로 임명되었다고 언급(리제선은 전 GBAE 국장으로, 핵 관련 프로그램에 관여하였거나 이를 지원한 이유로 2009년에 1718위원회에 의해 제재대상으로 지정)
 - b. 별칭: MAEI
 - c. 위치: HAEUN-2-DONG, PYONGCHON DISTRICT, PYONGYANG, DPRK

8. 군수공업부 (MUNITIONS INDUSTRY DEPARTMENT)

- a. 설명: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핵심 분야에 관여, 대포동2호를 포함한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 총괄 책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북한의 무기 생산 및 연구개발 프로그램 총괄, 2010년 8월에 자산동결 대상으로 지정된 제2경제위원회와 제2자연과학원(SECOND ACADEMY OF NATURAL SCIENCES) 이 군수공업부 소속, 최근 몇 년간 KN08이 탑재된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노력중
- b. 별칭: MILITARY SUPPLIES INDUSTRY DEPARTMENT
- c. 위치: PYONGYANG, DPRK

9. 우주개발국 (NATIONAL AEROSPACE DEVELOPMENT ADMINISTRATION)

- a. 설명: 위성 발사 및 로켓 운반체를 포함, 북한의 우주과학, 기술 발전에 관여
- b. 별칭: NADA
- c. 위치: DPRK

10. 39호실 (OFFICE 39)

- a. 설명: 북한 정부기관
- b. 별칭: OFFICE #39, OFFICE NO. 39, BUREAU 39, CENTRAL COMMITTEE BUREAU 39, THIRD FLOOR, DIVISION 39
- c. 위치: DPRK

11. 정찰총국 (RECONNAISSANCE GENERAL BUREAU)

- a. 설명: 2009년 초 조선노동당, 작전국 및 35호실 산하 정보기관들과 조선 인민국 정찰국을 통합하여 만든 북한내 최고 정보기관. 정찰총국은 재래식 무기를 거래하며, 북한의 재래식 무기회사인 Green Pine Associated Corporation을 통제
- b. 별칭: CHONCH'AL CH'ONGGUK, KPA UNIT 586, RGB
- c. 위치: 주소: HYONGJESAN-GUYOK, PYONGYANG, DPRK/대체주소: NUNGRADO, PYONGYANG, DPRK

12. 제2경제위원회 (SECOND ECONOMIC COMMITTEE)

- a. 설명: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핵심 분야에 관여, 북한의 탄도미사일 생산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지고 있으며, KOMID에게 활동 지시 하달
- b. 별칭: 미상
- c. 위치: KANGDONG, DPRK

별칭 목록 추가 :

남청강 무역회사(Namchongang Trading Corporation) (KPe.004)

→ 새로운 별칭 : 남흥 무역회사(Namhung Trading Corporation)

부속서 III :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선박

	선박 이름	IMO 번호
1.	철령 (령군봉)	8606173
2.	청봉 (GREENLIGHT) (BLUE NOUVELLE)	8909575
3.	청림 2	8916293
4.	서광호	9110236
5.	EVER BRIGHT 88 (J STAR)	8914934
6.	GOLD STAR 3 (BENEVOLENCE 2)	8405402
7.	회령	9041552
8.	후창 (어은청년)	8330815
9.	회천 (황금산 2)	8405270
10.	JH 86	8602531
11.	지혜산 (혁신 2)	8018900
12.	JIN TAI	9163154
13.	JIN TENG	9163166
14.	강계 (비류강)	8829593
15.	미림	8713471
16.	미림 2	9361407
17.	랑 (보통강)	8829555

	선박 이름	IMO 번호
18.	ORION STAR (RICH OCEAN)	9333589
19.	라남 2	8625545
20.	라남 3	9314650
21.	러명	8987333
22.	룡림 (전진 2)	8018912
23.	세포 (락원 2)	8819017
24.	성진 (장자산청년호)	8133530
25.	SOUTH HILL 2	8412467
26.	SOUTH HILL 5	9138680
27.	단천 (룡강 2)	7640378
28.	태평산 (PETREL 1)	9009085
29.	동홍산 (청천강)	7937317
30.	GRAND KARO	8511823
31.	동홍 1	8661575

부속서 IV : 사치품

(a) 고급 시계 : 손목시계, 화중시계 및 케이스가 여타 귀금속 또는 귀금속 도금으로 제작된 시계

(b) 아래와 같은 교통 수단

- (1) 수상 레크레이션 장비 (개인 선박 등)
- (2) 스노모빌 (2천미불 이상 가치)

© 납 크리스탈(lead crystal) 제품

(d) 레크레이션 스포츠 장비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연구보고서

국제사회 대북 경제제재의 현황과 이행 평가

발 행 일 2016년 10월 7일

발 행 인 이 덕 훈

발 행 처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주 소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전 화 02-6255-5203

인 쇄 처 신신문화인쇄주식회사

출판등록 2010년 5월 19일 제2010-000048호

주 소 (04307)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71길 19

-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본지에서의 출처를 명시하는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